

국제 ODA 동향

(2009. 12)

ODA 토평

[Page]

- ☐ 프로그램 원조(PBA) 이행 현황 및 시사점 [2]
 - ◆ 프로그램 원조의 정의, 지원 현황 및 시사점 정리
- ☐ EDCF의 MDB 협조융자 의의 [13]
 - ◆ EDCF의 MDB 협조융자 의의, 사업 현황 및 기대 효과 정리
- ☐ Friends of Democratic Pakistan(FoDP)의 현황 및 시사점 [18]
 - ◆ 파키스탄 공여국 협의체인 FoDP의 현황 및 시사점 정리

ODA 단신

- ☐ DAC 가입심사 특별회의 주요 내용 [26]
 - ◆ '09. 11월에 개최된 DAC 가입심사 특별회의의 주요 내용 정리
- ☐ 제15차 OECD/DAC 원조효과작업반 회의 주요 내용 [30]
 - ◆ '09. 12월에 개최된 DAC 원조효과작업반 회의의 주요 결과 정리
- ☐ OECD/DAC 통계작업반 워크숍 주요 내용 [33]
 - ◆ '09. 12월에 개최된 DAC 통계작업반 워크숍의 주요 결과 정리
- ☐ 제4차 EDCF-JICA 정례회의 주요 내용 [41]
 - ◆ '09. 12월에 개최된 EDCF-JICA 정례회의의 주요 결과 정리

ODA 자료

- ☐ 아일랜드의 공적개발원조 체계와 현황 [43]
 - ◆ 아일랜드의 ODA 운용 체제 및 원조 동향 분석
- ☐ ODA 통합평가지침 및 매뉴얼 제정 [62]
 - ◆ ODA 통합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지침 및 매뉴얼 내용 정리

EDCF 소식

- ☐ 2009년 4/4분기 EDCF 소식 [70]
 - ◆ '09년 4/4분기 EDCF 주요 사업개요, EDCF 동향 및 '09년 11월 말 현재 EDCF 업무 통계

국내외 ODA 소식

- ☐ 국내외 ODA 소식 [87]
 - ◆ '09년 11월~12월 국내외 ODA 소식

ODA 토포 1

프로그램 원조(PBA) 이행 현황 및 시사점

【요약】

-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 및 아크라행동계획상 원조조화 이행지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의 PBA 지원확대 노력 강화
- 2007년 우리나라의 '총 원조 중 PBA 지원비율'은 1% 수준으로 조사대상 공여국 중 최하위를 기록 (공여국 평균 47%)
- 우리나라의 경우 DAC 가입에 따라 PBA 도입을 통한 원조 효과성 이행지표의 총체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예산지원(budget support), 비구속성 원조 확대, 수원국 시스템 활용, 공여국간 지원절차 조율 등 관련 제도개선 검토 필요

1. 논의 배경

- 1990년대 이후 프로젝트 원조의 한계에 대한 인식하에 MDB 및 주요 선진 공여국을 중심으로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원조(Sector-Wide Approach: SWAp)를 비롯한 프로그램 원조(Program-Based Approach: PBA) 지원체제 도입
- 2005년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상 원조 조화(harmonization) 노력의 이행지표(indicator) 중 하나로 'PBA 지원비율 확대'가 설정¹⁾되면서, 이의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PBA 지원확대 노력 강화

1) 파리선언은 원조조화를 위한 '공동절차 사용' 노력의 이행지표로 '총 원조 중 PBA 지원비율'을 설정하고, 2010년까지 PBA 지원을 총 원조의 66% 이상으로 확대 목표 설정

2. PBA의 정의 및 특징

□ OECD DAC는 프로그램 원조(PBA)를 다음과 같이 정의²⁾

- “PBA란 공여국간 조율을 통해 수원국의 개발계획 달성을 지원하는 개발협력 방식”
- 여기서의 Program은 ‘수원국의 개발계획’으로서, 빈곤감축전략(PRS), 분야별 개발계획, 주제별 개발계획, 기관별 개발계획 등이 해당

□ OECD DAC는 다음 4가지 특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PBA 방식 원조로 분류

- ① 개발계획에 대한 수원국의 리더십 발휘
- ② 단일의 종합 개발계획 및 예산체제 사용
- ③ 공여국간 조율을 위한 공식절차 존재
- ④ 공여국의 수원국 시스템 사용

OECD/DAC의 PBA 분류기준 (PBA Eligibility Criteria)

▶ 공여국이 지원하는 개발계획에 대해 수원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가?	Yes / No
▶ 단일의 종합 개발계획 및 예산체제가 사용되고 있는가?	Yes / No
▶ 최소한 아래 2개 이상의 시스템에 대해 공여국간 조율을 위한 공식절차가 존재하는가? (a) 보고, (b) 예산수립, (c) 자금관리, (d) 구매	Yes / No
▶ 공여국의 개발계획 지원시 최소한 아래 2개 이상의 수원국 시스템을 사용하는가? (a) 개발계획 수립, (b) 개발계획 시행, (c) 자금관리, (d) 모니터링 · 평가	Yes / No

* 위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PBA로 분류

□ PBA는 근래 부각된 분야별 원조*(SWAp)의 확장된 개념으로서, 개별분야 지원 뿐만 아니라 빈곤감축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개발 계획 지원까지 모두 포함함

* SWAp의 경우, 빈곤감축전략(PRS)에서 강조된 교육, 보건, 교통, 농업 등의 개별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활성화

2) 2000년대 이후 PBA 관련 원조공여기관 모임인 LENPA(Learning Network on Program-Based Approaches)를 중심으로 PBA의 정의 및 지원효과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

- 정책 또는 분야(sector)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PBA의 특성상 자금공여시 예산지원(budget support) 형태를 많이 활용
 - ‘예산지원’은 차관자금을 수원국 정부의 예산에 직접 투입하는 자금 공여 형태³⁾로서, 일반적으로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제한되지 않고 수원국의 재정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출 및 관리가 이루어짐
- 그러나, PBA는 ‘원조방식’의 하나로서 ‘자금공여 형태’(funding modality) 또는 ‘원조수단’(aid instrument)과는 구분되어야 하는 별개의 개념임
 - PBA는 ‘예산지원’ 외에 프로젝트 지원(project support), 풀 지원(pooled funding) 등의 자금공여 형태 뿐만 아니라,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등의 다양한 원조수단 활용이 가능
 - 따라서, 어떤 자금공여 형태 및 원조수단도 자동적으로 PBA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PBA 정의 및 분류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해당 여부가 결정됨. 예를 들어, ‘예산지원’이 무조건 PBA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프로젝트 지원’도 SWAp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경우 PBA로 분류 가능

PBA와 여타 원조방식 비교

구 분	프로젝트 원조 (Project Approach)	프로그램 원조 (Program-Based Approach)	거시경제 원조 (Macroeconomic Approach)
지원결과 및 책임	프로젝트에 국한	개발정책	거시경제정책 개혁 및 경제 조정
자금용도 제한 (targeting)	프로젝트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자금용도 제한	자금용도를 제한하나, 정책 달성이 목적	자금용도를 제한하지 않음
수원국 주인의식 및 책임 분담	프로젝트에 따라 상이하나, 대부분 공여국의 관여가 많음	수원국 주인의식 중요성 강조, 개발계획단계에서의 공여국의 역할도 인정	때때로 수원국의 주인의식이 제한적
공여국간 협력	제한적	수원국의 리더십 하에서 공여국간 지원절차 조율	중-상 수준

3) ‘예산지원’은 투입된 차관자금이 수원국 정부의 예산자금과 혼합된다는 측면에서 ‘풀 지원’(Pooled Funding)과 구분됨

3. PBA 이행현황 및 원조효과성

- OECD DAC은 파리선언 이행지표 달성 여부에 대한 1차 설문조사 (2006년)에 이어 2008년 2차 설문조사를 실시
 - 총 55개 개도국이 참여하여 2007년 총 원조액(채무탕감 및 인도적 지원 제외)의 절반 수준인 450억불에 대한 이행지표 달성 여부 조사
- 총 12개 이행지표 중 원조조화 관련 이행지표 중 하나인 ‘총 원조 중 PBA 지원비율’(indicator 9)은 2007년 기준 47%(공여국 평균)을 기록, 2005년 기준치인 43%에 비해 소폭 증가에 그친 것으로 분석
 - 2010년 목표치는 이를 크게 상회하는 66%로, 보다 적극적인 PBA 지원 확대 노력이 있어야만 목표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파리선언 이행지표 달성 진도 (2008 설문조사 기준)

Indicator	2005 baseline		2010 targets
1 Oper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17%	24% ← Distance to target (in 2007) →	75%
2 Reliable public financial management (PFM) systems	—	36%	50% of countries improve score
3 Aid flows are recorded in country budgets	42%	48%	85%
4 Technical assistance is aligned and co-ordinated	48%	60%	50%
5a Donors use country PFM systems	40%	45%	(80%)
5b Donors use country procurement systems	39%	43%	(80%)
6 Donors avoid parallel PIUs	1 817	1 601	611
7 Aid is more predictable	41%	46%	71%
8 Aid is untied	75%	88%	Progress over time
9 Donors use co-ordinated mechanisms for aid delivery	43%	47%	66%
10a Donors co-ordinate their missions	18%	21%	40%
10b Donors co-ordinate their country studies	42%	44%	66%
11 Sound frameworks to monitor results	7%	9%	35%
12 Mechanisms for mutual accountability	22%	26%	100%

4) OECD DAC은 동 지표 설정에도 불구하고 파리선언의 목적이 프로젝트 원조의 중단이 아니라 각국 여건을 고려하여 원조방식의 최적 조합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음을 강조

- 한편, 원조공여국의 경우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원조국의 PBA 지원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의 PBA 지원비율은 1% 수준으로 조사대상 공여국 중 최하위를 기록

주요 원조공여국의 PBA 지원 비율

국가명	PBA (USD million)			전체원조 중 PBA 비율	
	Budget Support	Others	Total	2005	2007
영국	776	373	1,149	61%	72%
일본	61	849	910	33%	52%
미국	59	1,554	1,613	29%	37%
독일	109	215	324	19%	34%
프랑스	80	80	160	30%	32%
이탈리아	8	59	67	39%	26%
스페인	40	25	65	14%	13%
포르투갈	2	0	2	4%	3%
한국	0	1	1	0%	1%

* 2006년 및 2008년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33개 개도국 기준

- 수원국의 경우 각국의 대내외 원조환경에 따라 상이하나, 원조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PBA 수원 비율을 기록

주요 수원국의 PBA 수원 비율

국가명	PBA (USD million)			전체원조 중 PBA 비율	
	Budget Support	Others	Total	2005	2007
요르단	147	222	370	n.a.	78%
가나	378	377	755	53%	69%
에티오피아	0	1,303	1,303	53%	66%
탄자니아	745	395	1,141	55%	61%
베트남	673	863	1,536	34%	58%
인도네시아	1,994	127	2,121	n.a.	51%
방글라데시	540	328	868	41%	50%
필리핀	583	45	628	n.a.	32%
캄보디아	40	162	202	24%	28%
콜롬비아	37	24	62	n.a.	16%

□ PBA 지원시 기대효과⁵⁾

- 중장기적 시각에서 정책 또는 분야 단계에서의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통해 개발목표 달성 및 원조 예측가능성 제고
- 프로젝트 원조시 제한받기 쉬운 수원국의 주인의식 강화를 통해 향후 개발계획 시행에 필요한 리더십 배양 및 자조노력 지원
- 공여국간 원조공여 절차 조율 및 수원국 시스템 활용을 통한 수원국의 거래비용 절감 및 역량배양 지원
- 개발계획 시행과 관련한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를 통해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중심 관리 지원

□ PBA의 지원효과 제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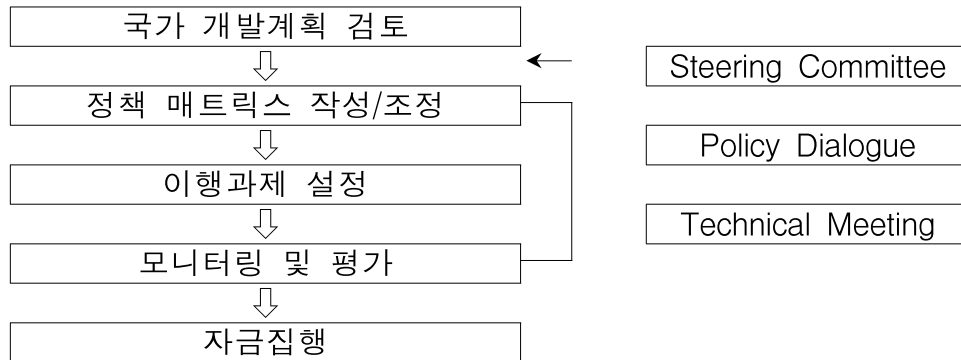
- 수원국은 분야별 정책 등 명확한 국가 개발계획과 국내 및 해외차입 재원을 모두 포괄하는 단일 예산체제 수립에 노력
- 공여국은 개발계획 수립·시행, 재정 관리, 모니터링·평가에 대한 수원국 시스템 활용에 노력
- 수원국·공여국은 다수 공여국간 지원절차 조율에 공동 노력

4. PBA 지원절차 및 사례

- PBA의 지원절차는 원조공여기관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국가 개발계획 검토, 정책 매트릭스(policy matrix) 작성, 이행과제(trigger) 설정, 모니터링 및 평가, 자금집행, 피드백을 통한 정책 매트릭스 조정 등으로 요약됨

5) PBA의 지원효과는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원조 의존도, 거시경제 및 예산 관리 능력, 분야별 정책 및 관리 능력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됨

PBA의 일반적 지원절차



① 국가 개발계획 검토

- 빈곤감축전략(PRS), 분야별 개발계획 등 PBA 지원근거가 되는 수원국의 국가 개발계획이 명확히 수립되어야 하며, 원조공여기관은 개발계획 달성을 위한 중기 소요예산 규모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지원분야 및 정책과제(policy action) 발굴을 검토

② 정책 매트릭스 작성

- 원조공여기관은 수원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 개발계획 달성을 위한 지원분야 및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각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기 정책 매트릭스를 작성

정책 매트릭스 (예시)

Area	2010	2011	2012
Infrastruc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opt market-based pricing systems to estimate the costs of state-funded civil engineering investments (Trigger) • Introduce modern 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corporate governance in provincial infrastructure fu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vide incentives for government procurement of energy-efficient equipment (Trigger) • Revise the road law to improve traffic safety through inter alia better standards and strengthened supervision of commercial vehicle opera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prove policy framework and procedure for gas pricing • Adopt user charges designed to better manage demand for infrastructure services • Develop legal framework for sound operation of the road maintenance fund operators

- 아울러, 지원분야별 개발결과(outcome) 평가를 위해 측정지표(indicator) 및 목표치(target)를 설정

개발지표 및 목표치 (예시)

Area	Indicator	Definition	Baseline (2008)	Target (2012)
Infrastructure	• Enterprises' satisfaction with infrastructure	• Proportion of enterprises citing infrastructure as a major constraint for business	11.9%	5%
	• People living in urban slums	• Fraction of the population living in houses not meeting government standards	25%	10%

③ 이행과제 설정

- 원조공여기관은 수원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 개발계획 달성을 위한 중요도에 따라 정책과제를 이행과제(trigger)와 참고과제(benchmark)로 구분하고, 이 중 이행과제는 차관자금 집행을 위한 전제조건(conditionality)으로 사용됨

④ 모니터링 및 평가

- 원조공여기관은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정책협의(policy dialogue), 기술협의(technical meeting) 등의 협의채널을 통해 수원국 정부 및 사업실시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정책과제 및 개발결과 측정지표의 달성 진도 점검 및 평가 수행

⑤ 자금집행

- 원조공여기관과 수원국 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한 평가 결과에 따라 이행과제 달성 여부를 판단하여 자금집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예산지원(budget support)등 정해진 자금공여 형태에 따라 차관자금 집행⁶⁾

6) 일반적으로 일부 부적격 지출(Ineligible expenditure)을 제외하고는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으며, 구매(procurement)와 관련한 제한조건도 부과하지 않음

□ WB의 빈곤감축지원차관(PRSC) : 對베트남 지원사례

- WB의 對베트남 PRSC(Poverty Reduction Support Credit)는 동국 정부의 사회경제개발계획(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SEDP) 시행 지원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차관⁷⁾
- 2006년 수립된 SEDP 2006-2010 지원을 위해 WB는 동 기간(5년)에 대응한 중기 PRSC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중
- SEDP 2006-2010상 언급된 4개 전략분야(비즈니스 개발, 사회통합, 천연자원 관리, 거버넌스 강화)를 중심으로 17개 지원분야 설정

對베트남 PRSC 전략분야별 지원분야

Business Development	Social Inclusion	Natural Resources	Modern Govern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obal Integration • State Sector Reform • Financial Sector Reform • Private Sector Develop. • Infrastruc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ucation • Health • Social Protection • Gen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nd and Forests • Water and Sanitation • Enviro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nning Processes • Public Financial Mgmt • Legal Development • Public Admin. Reform • Fighting Corruption

- WB는 여타 원조기관 및 동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SEDP 달성을 위한 각 연도별 정책과제로 구성된 중기 정책 매트릭스를 작성하고, 차관자금 집행(budget support 형태)의 전제조건으로 사용될 이행과제를 설정
- 원조공여기관은 동국 정부와의 정책협의 및 기술협의를 거쳐 매년 정책과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차기연도 정책 매트릭스 조정 및 이행과제 설정시 반영
- 동 PRSC에는 주요 MDB (WB, ADB) 및 선진 원조기관(DfID, JICA, AusAID, CIDA) 등 다수의 원조기관이 협조융자(co-financing) 형태로 참여하고 있으며, 각 공여기관은 매년 동국 정부의 이행과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차기연도 참여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발표

7) WB의 프로그램 원조는 Development Policy Lending(DPL)이라는 형태로 통상적인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Investment Lending(IL)과 구분 운용되고 있음

- 2008년의 경우 주관기관인 WB가 1.5억불, 여타 원조기관이 총 1.6억불 지원 약정 (2009년 WB는 3.5억불 지원 결정)

□ JICA의 기후변화프로그램차관(CCPL) : 對인도네시아 지원사례

- JICA의 對인도네시아 CCPL(Climate Change Program Loan)은 동국 정부의 기후변화를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Climate Change) 시행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분야 프로그램 차관
- 2007-2009 3년에 걸쳐 지원되며, 3개 전략분야(온실가스 감축, 기후 변화 적응, 공통 분야)를 중심으로 11개 지원분야 설정
- JICA 및 AFD가 협조융자 형태로 공동 지원하며, 양 기관은 동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중기 정책 매트릭스를 작성하고 자금집행(budget support 형태)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사용할 이행과제를 설정

對인도네시아 CCPL의 전략분야별 지원분야

Mitigation	Adaptation	Cross-cutting Issu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nd Use • Ener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ter Resource • Water Supply and Sanitation • Agricul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derstanding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 Mainstreaming Climate Change in National Development Program • CDM • Co-benefits • Fiscal Incentives • Early Warning System

- 원조공여기관과 동국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가 설치되고, 정책협의 및 기술협의를 통해 정책과제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 JICA 및 AFD는 매년 동국 정부의 이행과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차기연도 참여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발표
- 2009년의 경우 양 기관이 각각 3억불 규모의 지원 약정

6. 시사점

-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 및 아크라 행동계획상 이행지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PBA 지원확대 노력 강화
 - 우리나라의 경우 DAC 가입에 따라 원조 효과성 관련 제반 이행지표의 총체적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
 - PBA 도입시 직접적인 PBA 지원비율 증가 외에도 ① 수원국의 개발 계획 지원에 따른 주인의식 강화, ② 수원국 예산편성에 따른 원조의 예측 가능성 제고, ③ 재정관리 등 수원국 시스템 활용, ④ 공여국간 지원절차 조율에 따른 원조조화 증진, ⑤ 비구속성 원조 확대 등 원조 효과성 관련 이행지표의 포괄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향후 PBA 도입을 위해서는 PBA 지원시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지원(budget support), 비구속성 원조 확대, 수원국 시스템 활용, 공여국간 지원절차 조율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 검토 필요
- 아울러, 수원국마다 상이한 정책환경 및 지원분야별 개발여건 등 현지 원조환경에 대한 보다 면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PBA 지원을 위해 정책·실무 담당자의 전문역량 배양 필요
 - 국가 개발계획 검토, 정책과제 발굴·평가, 공여국간 지원절차 조율 등에 필요한 전문역량 배양을 위해 우선적으로 MDB 등 선진원조 기관이 주도하는 PBA 지원에 협조융자 방식으로 참여 검토

- 자 료 : 1) CIDA Primer on Program-Based Approaches, CIDA 2003
2) Reporting Directives for the Creditor Reporting System: Corrigendum on Programme-Based Approaches, OECD 2008
3) 2008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OECD 2008
4) Aid Effectiveness: A Progress Report on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OECD 2009
5) Harmonizing Donor Practices for Effective Aid Delivery, Volume 2: Budget Support, Sector Wide Approaches and Capacity Development in Public Financial Management, OECD 2006
6) Program Document for an 8th Poverty Reduction Support Credit (PRSC 8), Report No. 47908-VN, World Bank 2009

작 성 : 이 정 현, jhalee@koreaexim.go.kr

목차보기

ODA 토픽 2

EDCF의 MDB*와의 협조융자 의의

【요약】

-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원조 규모 감소 우려가 높아지고 다자기구들의 재원 확충을 위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협조융자를 통한 지원 확대 필요성 증가
- MDB와의 협조융자는 제한된 재원으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뿐 아니라, 다른 원조기관들과의 정책 조율 및 조정 등을 통해 원조 효과성을 제고시키고, 원조정책 개발 및 선진 원조기법을 습득할 수 있어 EDCF의 역량 강화에도 효과적인 원조 수단으로 평가됨
- EDCF는 ADB 및 AfDB와 협조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09. 11월말 현재 MDB와의 협조융자 실적은 총 13건, 301백만불로서 아직 미미한 수준
- 2010년 DAC 가입 및 G20 회의 개최국으로서 높아지는 우리나라의 위상에 따라 ODA 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MDB 협조융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 World Bank, Asian Development Bank(ADB), African Development Bank(Af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IDB) 등 다자간 원조 기구의 총칭

1. 협조융자 지원 배경

- 우리나라는 2010년 DAC 가입 및 G-20 회의 개최 등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EDCF 지원 규모 및 비구속성 차관 지원을 확대할 필요 증가
-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선진원조국 원조 규모의 감소와 국제원조 기관들의 재원 확충 수요 증가 등으로 원조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2. 협조융자의 의의 및 기대효과

- ☐ MDB와의 협력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아국의 가시성(visibility) 제고를 추진
 - 해당 MDB, 여타 협조융자기관들과의 협의 및 조정과정을 통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참가자로서 수원국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EDCF 가시성 제고에 효과적
- ☐ 제한된 EDCF 재원으로 대규모 사업 지원 가능
 - EDCF 단독으로 지원이 곤란한 대형 사업을 공동 지원함으로써 동일 금액으로 보다 더 큰 지원효과를 얻는 레버리지가 가능
- ☐ 원조의 효과성(aid effectiveness) 제고에 기여
 - MDB는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에 초점을 둔 국별 중장기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지원하므로 협조융자시 수원국 정책과의 조율(alignment), 원조기관 간 조정(aid coordination) 및 정책조화(aid harmonization)등을 통한 원조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
- ☐ 원조정책 개발 및 원조기법 습득 등 원조역량 강화
 - MDB의 프로그램 원조(program aid), 국별지원전략(country aid strategy), 섹터지원전략(SWAp; sector wide approach) 등 원조정책 개발 및 사업 준비, 심사, 사업관리, 구매 등 원조실무 전반에 걸친 선진기법 습득 등 원조역량 강화가 가능

□ 수원국 및 MDB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책 레버리지 효과 기대

- 특정 수원국 및 MDB와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EDCF의 지원목적 및 목표에 일치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정책적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신규 수원국과는 초기부터 유리한 협력관계 설정이 가능

□ 특정 지역, 공통과제(cross-cutting issues)에 있어서 국제원조사회와 공동보조

- 인프라구축, 녹색성장(기후변화), 민간섹터육성, 성평등(gender equality) 등 각 MDB별 중점지원전략 및 공통이슈들 중 아국 관심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을 선택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제원조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ODA 정책효과 달성을 촉진

□ EDCF 업무효율성 제고

- 사업 발굴, 준비, 실시, 사후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MDB와 분담 또는 일부 위임함으로써 원조업무의 거래비용 및 시간 절감과 동시에 사업의 질적 제고가 가능하며, 수원국 입장에서 사후관리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경감

3. 협조융자 지원 현황

□ EDCF의 '09. 11월 말 현재 MDB와의 협조융자 실적은 총 13건, 301백만불로 아직 미미한 수준 (아래 표 참조)

- 누계를 보면 ADB와의 협조융자 실적이 6건, 177.8백만불로 가장 많음
- 최근 AfDB와의 협조융자 증가 추세 ('09년 중 2건 승인 예정)
- 13건 중 10건이 구속성(Tied)이고, 3건(ADB 1건, AfDB 2건)만이 비구속성(Untied) 조건임

- 협조용자 전담조직인 현 경협사업부 MDB협력(소)팀의 전신인 경협개발실이 2007. 1월 구성된 이후 총 7건, 202.3백만불의 협조용자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총 협조용자 승인건수의 53.8%, 승인금액의 67.2%에 달함

MDB와의 협조용자 실적 ('09. 11월말 현재)

(단위: 백만불)

MDB	건 수	금 액
ADB	6	177.8
IBRD	2	40.0
IDB	2	25.5
CABEI*	1	23.6
AfDB	2	34.1
합 계	13	301

* CABEI(중미경제통합은행) :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4. 향후 협조용자 계획 및 전망

- 우리나라는 DAC 가입 및 G-20 회의 개최 등을 계기로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09년 1조원 ⇒ '15년 3조원)
-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천한 원조 역사와 경험 부족으로 원조역량이 부족하고 단기간 내 원조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인적, 제도적 인프라도 미흡한 상황
 - 또한, 이국간 원조시장은 중국, 인도 등 non-DAC 국가의 원조 참여 등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원조경쟁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원조 규모의 확대가 용의치 않은 실정임. 다자간 원조기구인 MDB를 활용한 원조규모 확대는 이러한 제약요인을 타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 따라서, G20 정상회의 차기 개최국으로서의 입장 등 높아지는 우리나라 위상에 따른 ODA 규모 확대의 필요성 및 국제원조시장 동향 등을 감안할 때 향후 EDCF의 MDB와의 협조융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MDB와의 협조융자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실행전략의 하나로 협조융자기관 즉 해당 MDB 맞춤형 협조융자(MDB custom-made co-financing)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World Bank의 기후변화 이니셔티브(climate change initiative), ADB의 GMS(Great Mekong Sub-region) 개발전략 등 각 MDB의 전략 및 해당 지역에 맞는 접근법(approaches)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시점임

작 성 : 구 본 현, bhkoo@koreaexim.go.kr

목차보기

ODA 토픽 3

Friends of Democratic Pakistan(FoDP) 현황 및 시사점

【요약】

- 파키스탄의 사회·경제 및 민주주의 발전을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결집시키고자 2008년 9월 FoDP가 결성되어 52억불 규모의 중기 지원 약속
- 기존 이국간협력 역량을 넘어서는 개발수요 분석, 집단적 사업 심사·지원이 기대되었으나, 체계적 운영체제 구축이 미흡하고 시범사업의 논의가 활발하지 못해 단기 개발사업 재원조달 창구 역할만 수행 중
- FoDP 본래 결성 취지인 중장기 파키스탄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참가국들간 지원역량 조화를 이끌어낼 파키스탄 정부의 주도적인 운영체제 구축 및 개발사업 시행역량 강화 필요

1. FoDP 개요

- Friends of Democratic Pakistan은 파키스탄의 사회·경제 및 민주주의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서남아시아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 필요성을 배경으로 2008년 9월 결성된 모임으로 현재 30여원조 공여국 및 다수 국제기구⁸⁾가 참여 중임
- 일련의 각급 회의를 통해 파키스탄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타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공표하고, 투쟁 과정에서 초래된 직·간접 피해 복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약 50억불의 재원지원을 약속 받았음

8)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스웨덴, 스페인, 아랍 에미리트, 영국, 이란, 이탈리아, 일본, 중국, 캐나다, 터키, 프랑스, 한국, 호주, EU, UN,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이슬람 개발은행

- 또한, 7개⁹⁾ 클러스터별 실무 회의(Working Group)를 비정기 운영하여 분야별 정책 및 프로젝트를 참여국(기구)앞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분야 모색 및 사업 발굴을 시도

2. 주요 회의 개최내용 및 성과

□ 발족 회의(Launch Meeting, '08.9.26)

- 미국 · 영국 · 아랍 에미리트 및 파키스탄이 공동 의장국이 되어 UN 총회 중간 세션 자리를 통해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파키스탄 우방국 그룹의 결성을 최초 발표
 - 당초 참가국은 총 10개국(독일, 미국, 아랍 에미리트, 영국, 이탈리아, 중국, 캐나다, 터키, 프랑스, 호주)이었으며, UN과 EU도 참가
- 서남아시아지역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파키스탄의 안정과 번영이 중요하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렸으며,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Asif Ali Zardari) 신임 파키스탄 대통령의 지속적인 대(對)테러전 지원 의사를 확인한 자리였음¹⁰⁾
-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은 파키스탄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동 그룹의 결성을 전폭 지지하면서, 대규모 파키스탄 지원안(5년간 매년 1.5억불)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켰고 국제사회의 동참을 독려

9) 개발(Development), 안보(Security), IDP(Internally Displaced People, 국내난민), 에너지(Energy), 제도 구축(Institution Building), 무역(Trade), 금융(Finance)

10) 전통적 우방관계였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 대신 미국을 지지하면서 외교 · 경제 · 군사적 지원을 받아온 무사라프 전(前)대통령이 사임하고, '08. 9월 대선을 통해 자르다리 대통령이 당선되었음. 그는 당초 친미성향 인사로 알려졌으나, 2007년 하반기 미군의 파키스탄 서부 국경 침범에 대해 무력 공격으로 대응하면서 양국간 관계가 다소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음.

□ 1차 전문가 회의(Expert Meeting, '08.11.17)

- 파키스탄과 아랍 에미리트가 공동 의장국을 맡아 아부다비에서 개최
- FoDP의 활동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상하고자 마련된 자리였으나,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참가국들의 원조 재원에 대한 약속(pledge)은 이루어지지 않음
- 파키스탄측 대표(Jave Malik, Ambassador at large)는 FoDP가 일반적인 원조공여국 그룹이 아닌 점을 설명하며, 경제적 지원은 파키스탄이 필요로 하는 도움 중 한 가지일 뿐이며, 역량강화, 민주주의 발전, 국방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방향이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

□ 2차 전문가 회의(Expert Meeting, '09.4.1~2)

- 1차 회의에 이어 아부다비에서 개최되었으며, 22개 참가국 및 관련 기구가 참석
- 5개 클러스터별 파키스탄 측 정책 구상 또는 구체 프로젝트를 두고 참가국들의 지원을 조율하고, 같은 달 개최예정인 각료회의 의제를 준비
 - 5개 클러스터: 개발, 안보, 에너지, 제도 구축, 무역·금융

□ 1차 각료회의(Ministerial Meeting, '09.4.17)

- 파키스탄 자르다리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도쿄에서 개최되었으며, 31개국, 18개 관련 기구가 참석
- 그간 전문가 회의 결과를 승인하고, 5개 클러스터에 대한 국제 공조를 수행하기 위한 메커니즘(follow-up mechanism)을 만들기로 합의
- 파키스탄 안정화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결집하는 동시에,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서남아 지역의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새로운 협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평가

- 특히, 동일자에 세계은행과 일본 정부가 공동 개최한 파키스탄 원조 공여국 회의(Donors Conference)를 통해 총 52억불에 이르는 주요국의 중기 지원 약속 발표
- 주요국 지원약속 규모: 미국 10억불, 일본 10억불, 사우디아라비아 7억불, EU 6.4억불, 이란 3.3억불, 아랍 에미리트 3억불, 한국 2억불, 터키 1억불 등
- ※ FoDP는 파키스탄의 장기적 정치·경제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조율하는 협의체 성격으로 가지는 반면, Donor Conference는 중기 개발협력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차이가 있음. 그러나, FoDP 참가국 구성이 원조 공여국과 별반 차이가 없어 Donor Conference는 사실상 FoDP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 창구의 역할 수행

□ 2차 각료회의(Ministerial Meeting), 터키('09.8.25)

- 파키스탄과 터키가 공동 의장국으로 이스탄불에서 개최
- 파키스탄 외교부 큐레쉬(Qureshi) 장관은 테러세력과의 전쟁 수행과정에서 많은 국내난민이 발생한 Swat과 Malakand 지역의 복구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FoDP가 그간 양자 협력 체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집단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
- Malakand 파일럿 프로젝트(전쟁피해지역 복구사업), 해외직접투자(FDI) 환경 개선을 위한 Public-Private Partnership 등이 거론되어 기존 이국간 원조사업의 역량을 넘어설 수 있는 수준의 지원사업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구체적인 지원구상에 합의하지는 못하였음

□ 정상회의(Summit Meeting), 미국('09.9.24)

- UN 총회 기간 중 파키스탄, 미국, 영국이 뉴욕에서 공동 개최하였으며, 우리나라를 비롯 12개국 정상 및 9개국 고위급 대표, 5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여 파키스탄에 대한 지원의사를 다시금 확인

- 주요 분쟁지역인 북서변방(North West Frontier Province)주, 소수종족 연방보호지역(Federally Administered Tribal Areas) 및 발루치스탄(Balochistan)주 일부지역에 대한 재건 및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Multi Donor Trust Fund 구성을 파키스탄 정부와 세계은행이 공동 발표
- 또한, 파키스탄의 주요 발전 저해 요인으로 에너지 공급 부족이 지적되어 아시아개발은행을 중심으로 동 분야에 대한 FoDP의 지원역량을 모으기로 하고, 이를 차기 각료회의 의제로 선정

3. 우리나라 참여 현황

☐ '09. 3월 공식 활동 시작, 2억불 지원 계획

- 우리나라는 외교채널을 통하여 '09. 3월 파키스탄 측에 FoDP 참여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이후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현지 대사관이 중심이 되어 실무반회의(Working Group Meeting) 등을 통해 각국 활동 정보를 입수하고 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율·전달
- 정상회의를 통해 향후 4년간 총 2억불(유상원조 1.8억불¹¹⁾ 및 무상원조 0.2억불) 지원계획을 밝혔으며, 특히, 인적자원개발, 정부역량강화, SOC 분야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기로 함

4.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FoDP 활동 의의

- 2000년 들어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이어진 미국의 대 테러전쟁은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지리적, 역사적으로 관련 깊은 파키스탄 에도 많은 실물 피해는 물론 국내 난민 발생 등 어려움을 초래

11) Framework Arrangement 체결('08.11)을 통해 2011년까지 1.6억불의 유상원조 지원을 이미 합의한바 있어 FoDP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유상원조 지원 증가는 2천만불로 볼 수 있음. (현재 기체결 F/A 개정 협의 중)

- FoDP는 파키스탄 개발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일관성 있는 협의체제 구성을 통하여 지원역량을 조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음
 - 전후 재건사업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일반적이었으나, 파키스탄과 같은 전쟁 당사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의 안보역량 강화를 주안으로 국제적 지원회의가 구성된 것은 이례적임. 이는 지역 전반적 발전기반 마련이 평화유지에 초석이 됨이 강조된 결과로 보임
- 파키스탄 정부 입장에서 52억불¹²⁾에 달하는 중기 원조재원을 약속 받았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각종 개발 프로그램의 수행계획을 보다 현실성 있게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 FoDP 운영상 문제점

- 구체 개발 사업을 조성하고, FoDP 참가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도적으로 개발정책을 추진해야할 파키스탄 측 시행기구의 역량 부족
 - 7개 클러스터 실무회의(Working Group)별 파키스탄 내 주무부처가 별도 배정되어 개별 프로젝트 재원조달을 담당하고 있어 FoDP 사무국을 통한 조율에 한계가 있으며, 일부 WG에서는 중복 사업이 제안되기도 함
- WG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 협의나 파키스탄 국가개발계획과 FoDP 제안사업의 연관성, 중점 추진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클러스터별 재원배분, 사무국을 통한 참가국별 주요 활동 정보공유 등 체계적 관리 체제 미비
 - 파키스탄 측에서 주요 추진사업을 선정하여 재원조달에 힘을 쏟기 보다는, 참가국들이 자체적으로 관심사업을 선정하여 알려줄 것을 희망

12) 약 20억불은 예산보조 형태로 지원될 예정

- 따라서, 각국 이국간 원조체제의 틀에 의지하여 사업추진이 논의됨으로써 당초 추구했던 국제 원조역량의 조율 내지 조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 향후 FoDP 발전 방향 및 우리나라의 참여 전략 제언

- 중장기 안정화 지원이 목표인 FoDP의 결성 취지에 맞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이국간 원조체제를 통한 단기 개발 사업 지원뿐만 아니라 전체 참가국의 지원역량이 집합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시범 사업의 발굴 및 지원구상 협의 필요
- 2009년 9월 정상회의시 발표된 Multi Donor Trust Fund 구성 계획이 순조로이 추진되고 적절한 규모의 재원이 확보되면, 보다 통합적인 재원관리를 통해 원조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World Bank 등 국제 금융기구에서 재원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동일 부문에 대한 지원 쏠림 및 원조공여국별 상이한 원조 절차, 관행 등에 부합하기 위해 투입되는 행정적 간접비용 최소화
 - 반면, 예산보조 형식으로 집행되는 기금규모가 큰 경우, 투명성 및 효과성에 대한 회의가 제기될 수 있으며, 거액 지원국의 경우 신탁 기금을 통한 간접지원보다는 직접 지원을 선호하는 일반적 경향이 있어 기금규모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도 이러한 맥락에서 그간 KOICA 무상협력자금 및 EDCF 유상 차관을 통해 추진해 온 이국간 개발협력 체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재원여력이 보다 큰 EDCF 자금을 활용한 FoDP 시범사업 참여에 대한 검토 필요
 - 향후 WG 모임 참여 등을 통하여 거론된 시범사업(Malakand 전쟁 피해지역 복구사업 등)의 논의 동향을 적시 파악하고, 인프라 건설사업 등 EDCF가 지원 노하우를 쌓아온 분야에 대해 참여 추진

- 이를 통해 아국 단독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비하여 보다 큰 원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및 다수 선진 원조 공여국들이 구체 사업의 공동 실행을 위해 어떠한 체제와 이슈를 활용하여 교류하는 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한편, 신규 DAC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아시아개발은행이 주도하고 있는 에너지부문 사업에 협조유자를 제공하여 공동 사업분석 및 심사를 진행하는 것도 우리나라 FoDP 참여의 가시성을 높이면서 원조 효과성 제고 가능

※ 참고자료: 주요 클러스터별 파키스탄측 정책 방향

구 분	정 책 방 향
개 발	- 경제개발을 통한 북서부지역의 안정화로 평화구도 정착 -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직업교육 프로젝트 수행
안 보	- 장비 보강을 통한 경찰 치안능력 강화 - 법집행기관의 역량강화
에 너 지	- 신규 발전소 건설, 인근국가와의 전력 스왑핑, 연료 확충을 위한 석탄개발 등을 통해 안정적 전력 공급 실현
제 도 구 축	- FoDP 참가국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민주주의, 교육, 인권 등 분야 제도 구축
무 역	- 파키스탄 상품 및 서비스의 FoDP 참가국 시장 접근성 제고 및 교역능력 개발을 통해 원조를 벗어나 스스로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는 수단 마련

자 료 : 1) 보도자료, 파키스탄 외교부 2009
2) FoDP 개요 등, 주한파키스탄대사관 2009
3) 보도자료, 일본 외교부 2009

작 성 : 구 윤 정, kooyj@koreaexim.go.kr

목차보기

 한국수출입은행

ODA 단신 1

OECD/DAC 가입심사 특별회의 주요 내용

1. 회의개요

- ☐ 주요 내용 : 가입심사 후 아국의 DAC 가입 확정
- ☐ 회의 일시 및 장소 : 11.25(수), OECD 본부

2. 주요 내용

☐ DAC 가입심사 개요

- DAC 의장의 DAC 심사과정 소개 및 진행순서 설명에 이어 DAC 사무국의 아국 실사결과 보고, 질의응답, 회원국들의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아국의 DAC 가입 최종 결정

☐ 주요 질의응답 내용

- 아국의 ODA 확대 계획 이행방안에 대해 질의
⇒ 아국은 과거 두 차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ODA 규모가 축소된 적이 없음을 소개하고, 정부의 중기 ODA 확대계획 이행의지를 재확인
- 원조의 비구속화 확대 등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아국의 노력에 대해 질의
⇒ 아국의 원조 비구속화 확대 계획, 중점협력국 축소 및 통합국별지원 전략 수립 계획 등을 소개하고, 비구속성 원조확대를 위해 MDB와의 협조옹자를 활성화하고, 최빈국 및 HIPC에 대한 무상원조 비율을 점차 증대할 것임을 설명

- 시민사회의 개발협력 참여방안에 대해 질의
⇒ 아국 정부는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의 개발협력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을 소개하고, 제4차 High Level Forum 준비과정 등에 CSO와의 연계 계획 등을 설명
- 아국 정부 녹색성장 전략의 개발협력과의 연계방안에 대해 질의
⇒ 아국 녹색성장 전략의 정책적 중요성을 소개하고, OECD의 녹색성장 전략이 향후 G-20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아국과 OECD가 협력해 나갈 것임을 언급

□ 우리나라의 DAC 가입에 대한 회원국들의 주요 평가

- 아국의 ODA확대계획, 원조체제 개선 노력 및 2011년 High Level Forum의 자발적 개최 등 우리의 적극적 DAC활동 참여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아국의 DAC가입에 적극적인 지지 입장 표명
- 단기간내 원조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아국의 개발경험이 기존의 유럽 국가 중심의 DAC 논의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
- 아국이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한국의 DAC가입이 다른 신흥공여국들의 DAC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DAC 가입 확정

- 회원국간 비공개 토의를 거쳐 우리나라의 DAC 가입을 최종 결정

붙임 : DAC 실사결과보고서 주요 내용
작성 : 이 동 훈, danielee@koreaexim.go.kr
정리 : 김 기 해, kkhmoon@koreaexim.go.kr

목차보기

(붙임) DAC 실사결과보고서 주요 내용

1. 우리나라의 ODA 체계 및 전략

- ☐ 우리나라의 '08년 ODA 지원 규모는 약 8억불, ODA/GNI 비율은 0.09%로 2015년 까지 DAC 가입 요건(지원 규모 1억불 이상 또는 ODA/GNI 0.20%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됨
- ☐ 우리나라는 ODA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ODA 선진화 방안」 채택, ODA 기본법 제정을 통한 법률적 기반 구축,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한 부처별 조정기능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ODA 체제 발전을 위해 노력

2.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

- ☐ DAC는 우리나라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와 관련하여 평가의 독립성 및 투명성 제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
 - 아국은 EDCF와 KOICA 사업 평가 공개를 통해 평가 투명성을 제고하는 외에도 평가 가이드라인 수립 등 평가의 독립성, 타당성 제고 노력

3. DAC의 언타이드 권고 이행 현황

- ☐ 우리나라의 언타이드 비율은 '07년 기준 약 25%로 DAC 회원국 평균(8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이에 대하여 아국은 '15년 까지 언타이드 비율을 75%까지 확대할 계획

4. DAC의 원조 조건(Terms and Condition)에 대한 권고 이행 현황

- ☐ 우리나라는 '08년 7월 EDCF의 유상원조 지원조건 개선 방침에 따라 최빈국에 대한 평균증여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5. 결론 - 우리나라의 DAC 가입 초청 권고

- ☐ 사무국은 우리나라의 ODA 지원규모 확대 계획, 부처간 조정 및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강화, EDCF 지원조건 개선 등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10년 1월 1일 자로 아국의 DAC 가입 초청을 회원국들에게 권고

ODA 단신 2

제15차 OECD/DAC 원조효과작업반 회의 주요 내용

1. 회의 개요

- ☐ DAC 원조효과작업반(WP-EFF)은 제15차 원조효과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파리선언(PD), 아크라 행동강령(AAA)의 Country-level 실행 및 HLF-4(2011년 서울개최)의 로드맵 구상 등을 논의
- ☐ 일시 및 장소 : 2009. 12. 2 ~ 12. 3,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2. 주요 논의 내용

☐ Cross Cluster Overview

- Ownership은 단순히 수원국 정부의 주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작업반 개도국의 Capacity Development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공여국과 수원국의 상호 책임성 및 적극적인 참여 요구
- 수원국의 필요에 입각한 원조 및 원조 예측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하는 한편, 수원국의 기존 시스템을 활용한 거래 비용의 절감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
-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각 Cluster에서 논의된 사항들의 이행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과 관리 필요

□ Implementing the PD and AAA at Country Level

○ 공여국과 개도국의 Action Plan

- 상당수의 회원국들이 이미 Action Plan을 수립하였거나 수립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피력하였고, Action Plan 수립 과정에 있어서는 **Field Level**의 실무자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
- Action Plan은 다양한 아이디어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각각의 계획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보공유와 조직적 차원의 지원도 절실히 필요함을 피력하면서, 원조 효과성과 연계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음을 강조
- 공여국과 수원국 뿐 아니라 많은 원조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도 Action Plan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Action Plan 작성 시 정부 대 정부 차원의 의견 교환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수립 초기과정에 시민사회, 현장 실무자 등이 참여하여 수원국과 협의하고 이를 공여국 정부가 적극 수용해야 함을 강조

○ Proposal for supporting progress at the country level ; country-led WP-EFF Facilitation Initiative

- 공여국의 Mission 팀은 Field Level의 직원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본부와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문제가 야기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촉구
- Field Level에서 실무자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본부의 실행의지가 중요하며 양자간의 분명한 의사소통이 필요
- Field Level 직원에 수원국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활성화 하여 Regional Platform으로 발전시키기를 촉구

- PD와 AAA에 대한 인식과 그 실천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PD, AAA에 대한 평가 작업이 중요함을 강조함은 물론, PD와 AAA를 의무 사항으로 인식하면서 동 원칙에 대한 이행이 더 중요함을 강조
- 공여국의 Action Plan은 수원국의 Needs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수원국은 최대한 구체적인 수요를 전달해야 함. 하지만 공여국은 Initiative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개도국의 수요에는 관심이 적어 공여국의 인식 전환이 필요
-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수원국의 시스템을 활용해야하며, 역량 개발(Capacity Development)을 위해 워크숍, 연수(Training) 등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

□ Brainstorming on a Roadmap to HLF-IV

- 다수의 회원국들이 ‘방법론(Methodology)’ 보다는 구체적인 실행을 강조하였으며,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자체의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이 중요함을 역설
- 또한 역량개발을 위한 ODA의 증대는 결과적으로 개도국의 ODA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
- 향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원조 효과성(Aid Effectiveness)을 개발효과성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
-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업무 담당 관계자 사이에서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각국 정치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원조 효과성에 대한 이해 공유 및 협력 필요

작 성 : 최 정 훈, jhchoy@koreaexim.go.kr
정 리 : 김 기 혜, kkhmoon@koreaexim.go.kr

목차보기

OECD/DAC 통계작업반 워크숍 주요 내용

1. 회의 개요

- DAC의 8개 작업반 중 하나인 통계작업반(WP-STAT)은 지난 5월 공식 회의 의제였던 Channel of Delivery 개정 및 국제평화유지 활동 보고, New typology 이행 등에 관한 계속적인 논의를 위하여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동 회의를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9. 12. 2 ~ 12. 4 (3일간), 오스트리아 외교부

2. 주요 논의 내용

가. Channel of Delivery 개정

(1) Channel of Delivery 개념의 명확화

- 회원국들은 Channel of delivery*가 매우 중요한 분석 도구로 활용됨에 따라, Channel of delivery를 DAC 통계지침의 “핵심 정의 (Key Definition)”에 추가하여 보다 명확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는 데 동의

* Channel of Delivery

Channel of Delivery는 사업실시기관(다자원조의 경우, 다자원조 수혜 국제기구)을 나타내는 CRS 통계 항목임.

예시 1) 공여국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동 사업을 AfDB가 이행하는 경우, Channel of Delivery는 AfDB로 입력

예시 2) ADB에 대한 다자원조 지원의 경우, ADB를 Channel of Delivery로 입력

- Channel of delivery는 다자간 원조 분석(multi-bi 원조 포함) 및 파리선언과 AAA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country-level에서의 분석(Ownership, Mutual Accountability, Aid Fragmentation 등)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음
 - 회원국들의 의견에 따라 향후 Task Team에서 Channel of delivery의 정의를 DAC 통계지침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검토할 예정
- 회원국들은 현 CRS 통계지침의 Channel of delivery 입력 방법에 대해 현재와 마찬가지로 사업 집행을 총괄하는 1차적 수준에서의 기관(First Level of Implementation)으로 입력하는데 동의
- 동 지침은 현재 Channel of Delivery를 사업실시기관(implementing agency)으로 정의하고, 만약 사업 이행단계별 실시기관이 다를 경우, 사업 집행 첫 단계에서의 실시기관을 Channel of Delivery로 기재하도록 지침
 - 독일 등 일부 회원국들은 공여국의 공공부문 내에서 사업 위임이 이루어질 경우, channel of delivery 입력 방법에 대한 문의를 제기하였는바, 사무국은 간결한 정보 수집을 위해 사업 집행을 총괄하는 1차적 수준에서의 기관으로 입력할 것을 권고

(2) Channel of Delivery 항목별 정의

- 회원국은 사무국이 제안한 Channel of delivery의 주요 항목에 대한 정의 초안(붙임)에 대해 큰 이견은 보이지 않았으나, 공공부문(Public sector), 다자기구(Multilateral agencies) 및 기타(Others) 항목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함을 지적

- 회원국은 기타 항목에 포함되는 연구소(Research Institute), 대학, Think Tank 등이 공공부문에 속한 경우, 공공부문과 기타 항목의 중복 가능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 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수립의 필요성 제기

(3) Channel of Delivery 항목의 세분화

- 사무국은 예산지원, 남남협력 등 신규 개념을 반영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공여국 정부, 수원국 정부, 제3국 정부의 세 항목으로 세분화 시키는 안을 제시
 - 회원국들은 파리선언 및 AAA 맥락에서 동 항목의 세분화를 통해 공여국, 수원국 등 집행 주체들의 책무성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
 - 다만 3개 하위 항목에 속하지 않는 사례(삼각협력, Co-financing, Joint Implementation 등)의 경우, 이에 부합하는 명확한 채널코드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 언급
 - 사무국은 Annex 2(ODA적격 국제기구 명단)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양자로 특정된(earmarked) ODA 사업을 이행하는 다자기구(EBRD, OECD 등)를 위해 다자기구 항목 아래 새로운 하위 항목(Agencies not on Annex 2)을 추가할 것을 제안
 -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3가지 대안을 도출, 차기 회의시 동 방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 ※ 현재 공여국은 동 기관들에 대해 다자원조 실적을 보고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특정된 기금(earmarked funding) 활동은 양자간 원조의 일부로 보고

국제기구항목(40000) 세분화 관련 3가지 대안

현재(3안, 오스트리아)	1안	2안(독일)
41000 - UN 기구	(유지)	UN 기구
42000 - EU Institution		
43000 - IMF		
44000 - 세계은행그룹		
45000 - WTO		Non-UN 기구
46000 - 지역개발은행		
47000 - 기타 다자기구		
	48000 - Agencies not on Annex 2 (추가)	

- ☐ 기타 항목 세분화와 관련, 민간기업(Private firm) 포함 및 대학과 연구소간 관계 등을 고려하여 3가지 대안을 도출하고 향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기타항목(50000) 세분화 관련 3가지 대안

1안	2안	3안
민간기업 연구소/대학/Think Tank	민간기업	민간기업
	대학	대학
	연구소/Think Tank	연구소/Think Tank
		기타

- ☐ NGO 항목 세분화와 관련, 자금 출처만으로 국내 NGO, 국제 NGO, local NGO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는 문제점에 대해, 사무국은 NGO의 본부 소재지, NGO들이 스스로 규정하는 기관 정체성(Identity) 등 NGO 구분을 위한 다른 기준들을 검토하고 지침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나. 국제평화유지활동 보고 방안 논의

(1) UNDPKO에 대한 ODA 실적 보고

- ☐ 회원국들은 UNDPKO의 평화유지활동 보고와 관련, 개별 미션별 보고(mission by mission basis)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개별 사업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찬성

(2)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양자간 원조 보고

- ☐ 회원국들은 국제평화유지활동의 범위가 비단 UN 뿐만 아니라 NATO, ESDP 등 Non-UN 기구들의 평화유지활동까지 확대됨에 따라, UN 평화유지활동만으로 제한된 현 분야코드 15230의 범위 확대 필요성 및 분야코드 15220과 15230간 구분이 모호한 점을 지적

※ 15230 : Post-conflict peace-building(UN) → Bilateral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peacekeeping operations

※ 15220 : Civilian peace-building,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 ☐ 이에 사무국은 Non-UN 기구들의 국제평화유지활동까지 포함하고, 민간주도의 분쟁예방분야(15220)와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분야코드 15230과 15220의 포함범위(coverage) 개정 초안 제시
 - 사무국 초안은 분야코드 15230은 non-UN 기구들의 국제평화유지활동까지 포함하지만, 양자간 원조에만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어, 현재 다자원조에도 분야코드를 보고하는 일부 회원국들은 이의를 제기
 - 사무국은 다자원조에 분야코드를 보고하고 있는 회원국들의 현황을 점검한 후 향후 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3)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ODA 적격성 평가

- 국제평화유지활동 수행을 위한 인력 파견 비용의 ODA 계상 방법에 대해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3가지 대안을 제시

인력 파견비용 계상을 위한 3가지 대안

1안	2안	3안
모든 경우에 7%의 동일한 계수 적용	회원국들이 개별 사업의 목표 및 내용 (mandate of activities) 검토 후 자체적으로 계수 산출하여 적용	1안/2안의 선택적 적용

- 다수의 회원국들이 3안을 지지하였으나, 사무국은 3안이 신뢰성 (Credibility) 결여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지양할 것을 권고

다. 리오마커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보고 방안

- 사무국은 수원국에서 진행되는 기후변화 관련 사업이 개발 효과에 대한 검증없이 ODA로 보고되는 경향이 있고, 수혜 혜택이 공여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 기후변화 관련사업의 ODA 적격성 판단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 수립 필요성 제기
- '10. 2월 개최예정인 DAC 통계작업반-환경네트워크 합동회의(DAC WP-STAT/ENVIRONET)에서 기후변화 적응 관련사업의 ODA 적격 범주화 및 CRS 통계보고 방식에 대해 논의될 예정
 - '09. 12월 DAC 회의에서 기후변화적응 마커의 실무적 정의(Working Definition) 승인

3. 향후 계획

- ☐ 제61차 통계작업반 공식회의는 2010년 6월, DAC 통계작업반-환경네트워크 합동회의는 2010년 2월 개최 예정

붙임 : Channel of Delivery 주요 항목별 정의(사무국 제시안)

작성 : 서문근영, suhmoongy@koreaexim.go.kr

정리 : 김기혜, kkhmoon@koreaexim.go.kr

목차보기

(붙임) Channel of Delivery 주요 항목별 정의(사무국 제시안)

10000	Public sector (Donor government/ Extending agency, Recipient government)
Reference	Not explicitly defined, but elements for a definition can be found in the DAC Directives, para. 33 , which states that "Official transactions are those undertaken by central, state or local government agencies at their own risk and responsibility..."
Proposed Definition	Public sector channels include central, state or local government entities in donor or recipient countries. This includes delegated co-operation (i.e. when the donor delegates the implementation of a given activity to another donor country).
20000	NGOs and civil society (NGOs in donor, recipient, third country; international NGOs)
Reference	CRS Directives, para. 99: <i>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re defined as private non-profit-making agencies, including co-operative societies and trade unions, which are active in development and national in the sense that their funds are fully or mainly obtained from sources in the donor economy. Agencies which are funded internationally are classified as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i> DAC Directives, para. 32 further state that the heading NGOs includes also "ad hoc bodies set up to collect funds for a specific purpose, e.g. catastrophe or famine relief, which may disappear once the particular need has been dealt with" and "development and welfare expenditures of religious bodies or of private profit-making agencies, provided such expenditures do not have a primarily religious or commercial motive". ¹
Proposed Definition	A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NGO) is any non-profit entity which is organised on a local, national or international level with no significant participation or representation from any official body. NGOs include foundations, co-operative societies, trade unions and religious bodies conducting activities in favour of development in or for the benefit of aid recipient countries, and ad-hoc bodies set up to collect funds for a specific purpose.
30000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Reference	DAC Directives, para. 1.26: <i>Public-private partnerships are collaborative arrangements between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encies and private actors to address specified developmental issues. Their board or other governance structure includes a significant representation of both public officials and private individuals who have a joint decision making process.</i>
Proposed Definition	Same as above.
40000	Multilateral organisations (UN, WB, IMF, Regional Banks)
Reference	Adapted from DAC Directives, para. 9: <i>Multilateral organisations are international institutions with governmental membership which conduct all or a significant part of their activities in favour of development and aid recipient countries. They include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such as the World Bank and regional development banks, UN agencies and regional groupings (e.g. certain EU Institutions and Arab agencies).</i>
Proposed Definition	Multilateral organisations are international institutions with governmental membership which conduct all or a significant part of their activities in favour of development in or for the benefit of aid recipient countries.
50000	Other
Reference	None
Proposed Definition	Implementers that cannot be placed in any other channel category. These may include individual consultants, private for-profit firms and other private entities, research institutes, universities and think-tanks.

1. The Directives make also reference to "organisations listed in the *Directory of Non-Governmental Development Organisations in OECD Member Countries Active in Sustainable Development*, OECD Development Centre, 1995, or similar directories, or if not listed, those which would seem prima facie to be eligible for listing there".

ODA 단신 4

제4차 EDCF-JICA 정례회의 주요 내용

1. 회의 개요

- 장소 및 일시 : 일본 도쿄 JICA 본점, '09.12.1~12.2
- 목적 : 기후변화, 정보교류 등 국제원조 사회에서 JICA와의 협력 확대 방안 논의

2. 주요 논의 내용

□ 일본의 최근 ODA 환경

- '09년 8월 하토야마 정부 출범 이후 효율적인 원조 추진 강조로 인한 원조정책의 방향 전환 가능성 및 정부 예산 삭감 논의와 관련한 ODA 예산 조정 가능성 시사
 - 현재 무상자금협력 중 공공건설 사업 예산에 대하여 1/3 감축 예정

□ JICA의 현안 과제

- 단기적으로는 전 세계 금융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및 경제위기에 취약한 수원국에 대한 지원을 지속
- 중기적으로는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취약국가(Fragile States)에 대한 지원 강화
- 장기적으로는 Post-Kyoto Protocol 및 하토야마 선언(Hatoyama Initiative)에 따른 장기 기후변화 대응

□ 일본의 DAC Peer Review 수검

- 일본은 '09년 10월 중 방글라데시와 케냐 등의 현장실사(field mission)를 포함한 DAC의 Peer Review를 수검
- 주요 수검내용
: 정권교체가 ODA 정책·전략에 미치는 영향, ODA 규모와 향후 전망, ODA에 대한 국민 지지정도 및 국회와 대중지지 획득을 위한 전략, 새로운 JICA의 출범과 그 시너지 효과, 일본 외무부와 JICA의 업무 분화 정도, 국별 & 프로그램 기반 접근 강화, 결과에 기반한 평가 및 모니터링, 파리선언 및 아크라 행동계획 지향을 위한 노력, 개발을 위한 ODA 정책과 여타 정책과의 정책일관성

□ 기후변화 정책 및 프로그램 차관 논의

- 일본 정부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한 기후변화 관련 정책인 「Cool Earth 50」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동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 「Cool Earth Partnership」 금융 지원 계획을 마련,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경제성장을 위해 '08-'12년 기간중 총 100억불 지원 계획
- 이번 정례협약에서 EDCF와 JICA는 이러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개도국 정부의 기후변화사업 추진의지 제고방안,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지원현황, 기후변화 관련 MDB 펀드 참여, 對 베트남 기후변화 프로그램 차관 관련 협력방안 등을 논의함

작 성 : 황 병 현, hbh@koreaexim.go.kr

정 리 : 김 기 혜, kkhmoon@koreaexim.go.kr

목차보기

ODA 자료 1

아일랜드의 공적개발원조 체제와 현황

1. 아일랜드 원조 정책 개요

- 아일랜드 원조는 1974년 DAC 가입과 동시에 원조 담당 기관인 Irish Aid 설립 이후 양적·질적측면에서 공히 지속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는바, 2008년 현재 13억불 규모의 ODA를 공여하였으며, ODA/GNI 비율 0.59%인 주요 공여국임
- 아일랜드는 20세기 후반 아일랜드 대기근으로 인해 빈곤을 겪은 역사적 경험과 약자를 돕는 아일랜드의 전통 등이 아일랜드 원조의 근간을 형성
- 아일랜드는 '03년 DAC 동료검토(Peer Review)에 따른 개선사항 점검 및 원조의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06년 아일랜드 원조 백서(White Paper on Irish Aid)를 발간
 - 동 백서는 아일랜드 원조의 목표를 지구적 빈곤 감축 및 빈곤국의 지속가능한 세계화로 설정하고, 아일랜드 원조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아일랜드 원조 방향 및 규모를 설정하는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

아일랜드 개발원조의 비전

-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
-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증대
- 프로그램 원조 집중
- 거버넌스 구축 및 부패 관리
- 글로벌 거버넌스에 기여

- 아일랜드는 2006 원조 백서에 기반한 우선지원분야(Priority area)를 중심으로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이니셔티브들을 설정하고 체제 개선 시행
 - 인도적 지원
 - Rapid Response Initiative : 개발도상국에서의 예기치 못한 재해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
 - Hunger Task Force : 개발도상국, 특히 아프리카에서의 만성적인 기아에 대처하기 위한 아일랜드의 역할 개발 및 권고
 - 거버넌스, 평화 및 안보
 - 안정성을 위한 기금(Stability Fund) 조성 및 분쟁해결팀(Conflict Resolution Unit) 창설
 - 거버넌스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전략 지침서인 “Building Good Governance” 수립
 - 무역과 개발
 - 다자기구의 최빈국을 위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이니셔티브 지원
 - 공공정보 및 개발관련 교육
 - 자원봉사 및 정보센터 설립(2008년)
- 아일랜드 정부는 2005년 9월 UN 총회에서 국민총생산(GNP) 대비 ODA 비율을 2010년 0.60%, 2012년 0.70%(UN 목표치) 달성할 것을 공약하였는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15억유로씩 원조 규모를 확대할 계획 표명

2. 아일랜드 원조 전략

가. 양자간 원조

☐ 프로그램 원조*의 비중 확대

- 원조 채널 배분에 대한 전략 부재로 인하여 시민사회, 다자간 원조, 인도주의 채널을 통한 원조의 비율은 증가한 반면, 프로그램 원조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는바, 프로그램 원조의 전략적 확대 필요성 제기
- DAC은 2009년 Peer Review에서 프로그램 원조를 통한 대외 원조의 비중을 확대하도록 권고

프로그램 원조

☐ 프로그램 원조란?

공여국(기관)이 1:1로 해당 수원국 내의 지정된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프로젝트원조와 달리, 프로그램원조는 수원국이 계획한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여러 공여국(기관)들이 공동으로 지원 가능

☐ 프로그램 원조의 장·단점

○ 장점

- 수원국 행정시스템이용을 통해 치안 및 인력 이용 등에 강한 행정력 발휘
- 수원국의 개발사업에 대한 주인의식 및 책임감 증진
- 거래비용 및 불필요한 행정비용 지출 감소로 비용절감 효과 창출
- 개도국과 공여국간의 파트너십 증진 및 장기적 협력 가능
- 수원국 주인의식 제고에 따른 자발적인 행정시스템 개선(민주주의, 인권, 법치국가 전환, 부패청산 등)

○ 단점

- 원조의 투입방향, 투입여부 등 원조의 투명성 확보가 어려움

□ 지원대상국가 집중을 통한 원조 효과성 제고

- 아일랜드의 최빈국 및 아프리카 지역 등, 소수 국가에 대한 집중된 원조는 아일랜드식 개발원조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
 - 아일랜드의 원조 총액 대비 20위 내 국가들 중 15개 국가가 아프리카에, 그 중 14개 국가가 최빈국(LDC) 그룹에 속해 있으며,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08년 전체 양자간 원조의 76.7%로, DAC 평균(39.0%)보다 현저히 많은 비중을 차지
 - 또한 9개 프로그램 원조 국가(우간다,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잠비아, 레소토, 말라위, 베트남, 동티모르)에 대해 프로그램 원조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원조 및 기술협력 등을 중점 지원하여 원조의 효과성 제고 기여

□ 중점지원분야에 대한 원조 집중

- 2006 아일랜드 원조 백서에서 7개 중점지원분야*를 설정하고, 특히 교육, HIV/AIDS, 거버넌스 및 인도적 지원 등 분야에 대한 원조 집중 강조
- * 중점지원분야 :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emergencies), 거버넌스 역량 및 책임성, 무역과 개발, 사회·생산분야, 성평등·환경·HIV/AIDS·거버넌스, 평화·안보·개발, 공공정보 및 개발교육 등
- HIV/AIDS는 아일랜드 원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Cross-cutting 이슈로서 동 분야에 대한 원조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 및 전략 지침(Tackling HIV and AIDS to Reduce Poverty and Vulnerability)을 수립할 예정
- * 2006년 아일랜드 수상은 개발도상국의 HIV/AIDS 및 그 외 전염병에 대한 지원을 1억 유로로 확대시킬 것을 공약

나. 다자간 원조

☐ 국제원조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 접근

- 2006 아일랜드 원조 백서에서 다자간 원조의 이행 및 협력에 대한 총체적 전략을 수립하였는바, 향후 다자간 원조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청사진으로서 역할 기대
- 아일랜드는 다자간 원조에 있어서 주요 다자간 원조 파트너인 EC, UN, 세계은행그룹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UN기구들에 대한 원조에 대해서는 UNICEF, UNFPA, UNHCR, UNDP, WHO 등과 협정 체결을 통해 더욱 전략화, 체계화된 접근을 시도
- 이러한 파트너십의 증가로 인해 UN에 대한 출연이 '02년 40백만불에서 '08년 133백만불로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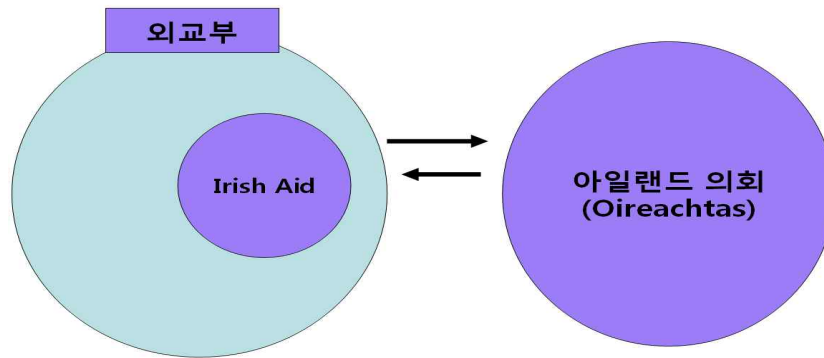
☐ 한편 아일랜드는 효율성, 신속성 및 전문성을 갖춘 국제원조기관에 대한 출연을 통해서 원조의 효율성 제고 모색

3. 現 아일랜드 ODA 운용체제 및 조직

가. ODA 운용체제

- ☐ 아일랜드의 ODA는 전반적으로 외교부 중심 체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74년 외교부 산하에 대외원조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Irish Aid가 아일랜드 대외 원조의 대부분을 담당하면서, 외교부 및 의회와 연계하여 활동

아일랜드의 ODA 운용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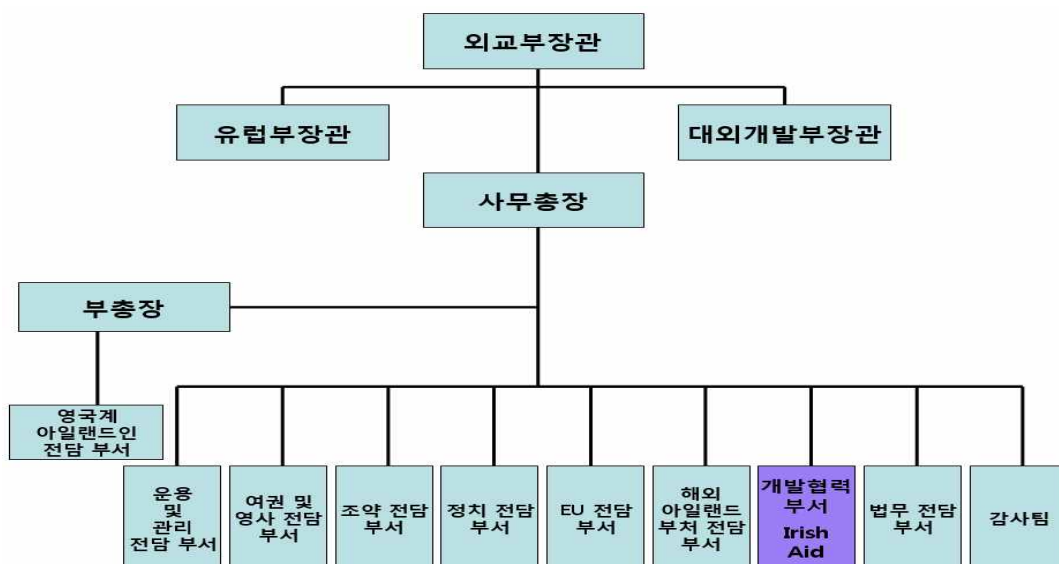


나. 주요 조직

□ 외교부(DFA,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 외교부장관 및 대외개발부장관(Minister of State for Overseas Development)이 Irish Aid의 모든 대외 원조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며, 외교부 내 Irish Aid에서 아일랜드의 전반적 원조를 담당

외교부 조직도



□ Irish Aid

- 1974년 아일랜드의 DAC 가입과 동시에 대외원조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만들어진 기관으로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를 함께 담당하는 통합형 기관의 형태
- 2006 아일랜드 원조 백서 발간 후 외교부 내 개발협력 관련 업무 통합을 위해 외교부 개발협력단(DCI, Development Cooperation Ireland)과 개발협력이사회(DCD,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가 통합되면서 Irish Aid로 개칭
- Irish Aid는 2005년 이후 부국장(Deputy Director General) 직위를 신설, 개발협력국장(Director General)과 관리 측면에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지역에 대한 운영 책임도 별도로 지게 하였으며, 두 직위 모두 외교부 관리자문위원회(Management Advisory Committee)에서 차관보(Assistant Secretary)급임
- 개발협력국장, 부국장 및 부서장들로 구성된 고위관리그룹(Senior Management Group)은 매월 회의를 통해 원조정책 및 프로그램 관련 이슈를 논의하며, 매년 IDCD에서 승인하는 예산안 제출 담당
- '08년 현재 Irish Aid의 직원은 총 184명으로, 본부 인력 145명 및 현지 파견 인력 39명(permanent pos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지 채용 직원은 290명으로 2003년에 비해 크게 증가
- '07년 기준 전체 양자간 원조에서 Irish Aid가 담당하는 원조 비중은 98.54%로 거의 모든 양자간 원조가 Irish Aid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다자간 원조의 경우 Irish Aid가 담당하는 원조 비중은 49%로, 전체 아일랜드 원조의 83%를 담당하는 핵심 원조 기구

아일랜드 원조의 기관별 분포('07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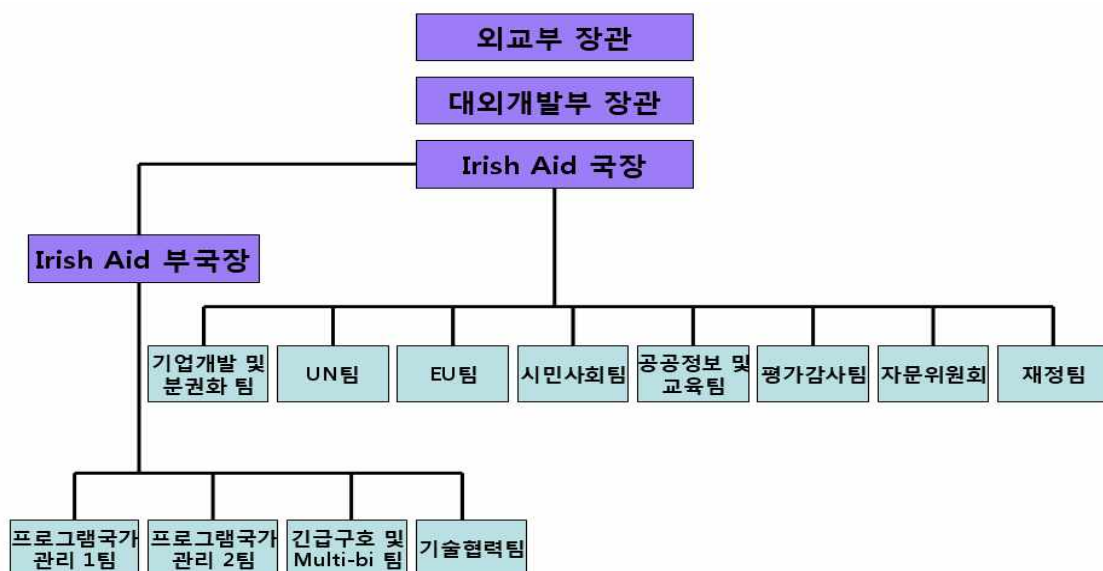
(백만유로)

	양자간원조	다자간원조	총ODA
총 원조	606.0	264.8	870.9
Irish Aid	597.2	128.6	725.8
기타정부기관	8.9	54.2	63.1
EU개발협력	-	82.0	82.0

출처 : Memorandum of Ireland, 2009

- 아일랜드는 정부 분권화의 일환으로 2007년 Irish Aid의 본부를 수도 더블린(Dublin)에서 리머릭(Limerick)으로 이전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2008년 12월에 수개월에 걸쳐 이전 완료됨
- DAC는 '09년 Peer Review를 통해 본부 이전이 더블린에 위치하고 있는 다른 정부기관, NGO 및 타국 대사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의 접근성을 저해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면서, 아일랜드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 원조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권고

Irish Aid 조직도



□ 의회(Oireachtas)

- 아일랜드의 의회는 예산위원회(Public Accounts Committee) 및 외교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Foreign Affairs)를 통한 ODA 예산 승인, 대외 원조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아일랜드 원조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영향력 행사
- 일례로 '09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아일랜드 의회는 예산 수정안(Supplementary Budget 2009)을 통하여 외교부 예산 및 개발 원조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하였고, DAC는 아일랜드의 개발원조 확대목표('12년 0.7%) 달성에 우려 표명

□ 개발에 대한 부서간 협의회(IDCD, Inter-Developmental Committee on Development)

- '07년 설립된 IDCD는 의장인 대외개발부장관과 각 부처의 차관급 인사들로 구성되며, Irish Aid가 이 협의회 사무국으로서 연구 및 일관성을 위한 정책 분석 등을 담당
- IDCD는 아일랜드의 대외 원조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간 일관성 제고 및 정책일관성 모니터링, 전문 인력 및 기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부 부처간 협력 및 지원 강화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부처간 발생하는 잠재적 정책 충돌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음
- DAC은 IDCD가 개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만한 정책 및 입법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충분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4. 원조 동향 통계 분석

가. 전반적인 원조 규모

- 아일랜드는 2008년 순지출 기준 13억2천8백만불의 ODA를 공여하여, 22개 DAC 회원국 중 17위의 원조 규모, ODA/GNI 비율은 0.59%로 22개 DAC 회원국 중 6위를 차지하는 주요 원조 공여국임
- 2008년도 전체 ODA 중 양자간 ODA와 다자간 ODA의 규모는 각각 931백만불과 397백만불로 약 70:30 비율이며, 원조 채널에 따른 배분 전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율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

아일랜드의 원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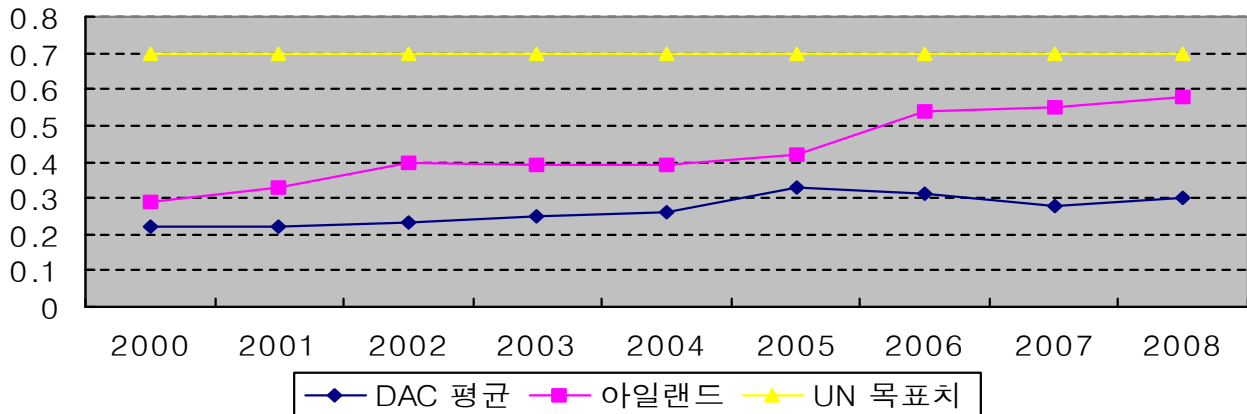
(백만불)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ODA	397.75	503.56	607.44	718.94	1,021.66	1,192.15	1,327.85
양자간 ODA	267.13	351.74	409.59	482.25	632.29	824.08	930.69
무상원조	267.13	351.74	409.59	482.25	632.29	824.08	930.69
유상원조	-	-	-	-	-	-	-
다자간 ODA	130.62	151.82	197.85	236.7	389.37	368.07	397.16
ODA/GNI (%)	0.4	0.39	0.39	0.42	0.54	0.55	0.59

- '09년 예산 수정안에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예산 압박의 영향으로 개발협력 예산 중 95백만 유로(약 1억4천만 달러 상당)가 감소하였는바, DAC은 이에 대해 아일랜드의 원조 확대 목표(2012년 0.70%) 달성에 대한 우려 표명

※ 국회는 '10년 외교부 예산(개발협력 예산 포함)으로 197백만 유로 승인

ODA/GNI 비중 추이



나. 양자간 ODA 현황

[원조형태별 현황]

- '07년 아일랜드는 전체 ODA의 69%인 824백만불을 양자간 원조로 공여하고 있으며, 전부 무상원조로 제공
- 아일랜드의 양자간 원조는 국가지원전략에 기초하여 프로그램 원조 국가들을 중심으로 배분되고 있으며, 본부에서 인도적 지원, NGO 지원 및 Multi-bi 원조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행
- 아일랜드는 9개 프로그램 원조국가*에 대해 전체 양자간 원조의 60%를 제공할 정도로 프로그램 원조에 대한 비중이 큰 편이며, 향후 프로그램 원조국을 10개로 확대할 계획

* 프로그램 원조 국가 : 에티오피아, 레소토, 모잠비크,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말라위, 베트남, 동티모르 총 9개국

- 아일랜드는 프로그램 원조를 통해 동 수원국들과 장기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 대해 원조 효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일정 규모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아일랜드 프로그램 원조의 형태

① 지역기반프로그램(Area-Based Programme)

- 아일랜드는 지역기반프로그램을 통해 수원국 정부와 함께 여러 분야에 걸쳐 효율적이고 높은 수준의 원조를 수행하기 위한 수원국의 역량 개발 지원
- 이는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해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어 현장 실무에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 주요한 척도(barometer)로서의 역할 가능

② 부문 접근방식(Sector-Wide Approaches)

- 동 방식은 공여국간 원조분업을 기반으로 현지 수준에서 보건, 교육 등 특정 분야에 대하여 다른 공여국과 함께 지원하도록 하며, 지원된 자금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제한

③ 일반예산지원(General Budget Support)

- 다수의 공여국들이 직접 수원국 정부 예산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원국 정부가 스스로 개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 개발협력을 가능케 하는 장점이 있음

○ 아일랜드의 프로그램 원조 지원국 선정 기준

- ① 빈곤도(Poverty)
- ② 개발효과(Scope for Ireland to make a development impact)
- ③ 거버넌스(Governance)
- ④ 안정성(Security and Stability)
- ⑤ 지역적 범위(Regional Dimension)
- ⑥ 타 공여국들의 참여 및 협력

[지역, 소득그룹별 현황]

- 아일랜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 가장 큰 규모의 ODA를 공여하고 있는바, '08년에는 전체 양자간 원조(지역 미배분 제외)의 77.8%에 해당하는 589백만불을 동 지역에 배분

양자간 원조의 지역별 배분 현황(순지출 기준)

(백만불)

지 역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비중(%)
아프리카(a)	190.7	247.4	289.7	308.0	389.1	499.9	610.3	80.6
사하라이북	0.1	0.7	0.3	0.4	0.6	0.5	0.5	0.1
사하라이남	190.6	246.6	289.4	307.7	388.6	499.4	588.8	77.8
아메리카(b)	8.8	11.2	14.1	14.0	19.4	26.5	25.6	3.4
아시아(c)	22.7	29.9	29.7	58.6	61.8	90.5	113.3	15.0
유럽(d)	3.5	3.8	3.1	4.9	5.4	5.6	7.7	1.0
오세아니아(e)	0.2	0.2	0.1	0.0	0.0	0.0	0.1	0.0
지역별 배분 가능 (f= a+b+c+d+e)	225.9	292.4	336.7	385.6	475.7	622.6	757.0	100.0
지역미배분(g)	41.3	59.4	72.9	96.7	156.6	201.5	173.7	-
합계(h=f+g)	267.2	351.8	409.6	482.3	632.3	824.1	930.7	-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특히 최빈국)을 중점 지원하는 전략에 따라, '08년 기준 아일랜드의 주요 지원대상국 중 7개 국가가 아프리카 지역 국가¹³⁾이고 그 중 가장 지원 비중이 큰 수원국은 우간다로 총 81백만불 규모의 ODA를 수원
- 9개 프로그램 원조 국가에 대한 지원 금액('05-'07 평균)은 전체 양자간 원조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는바, 동 국가들에 대한 원조 집중도가 높은 편임

13) 우간다,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잠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아일랜드의 '07-'08 주요 수원국 현황(1~10위)

(백만불)

순위	2007		2008	
	국가	금액	국가	금액
1	모잠비크	68.72	우간다	80.87
2	우간다	65.85	모잠비크	74.18
3	에티오피아	58.94	에티오피아	72.67
4	탄자니아	52.09	탄자니아	65.47
5	잠비아	37.14	잠비아	43.41
6	베트남	27.3	베트남	30.83
7	수단	25.65	남아프리카공화국	29.13
8	남아프리카공화국	19.77	수단	24.15
9	레소토	19.03	말라위	22.95
10	시에라리온	17.16	레소토	20.91
1~10위 합계		391.65		464.57

- '08년 소득그룹별로는 최빈국에 양자간 원조(소득미배분 제외)의 76.7%를 지원하고 있으며, 10.9%를 저소득국에 지원

'08년 소득그룹별 원조 현황(순지출 기준)

(백만불)

구분	최빈국	저소득국	하위중 소득국	상위중 소득국	배분 가능원조	소득 미배분	합계
금액	526.89	74.74	50.05	35.22	686.9	243.78	930.68
비중(%)	76.7	10.9	7.3	5.1	1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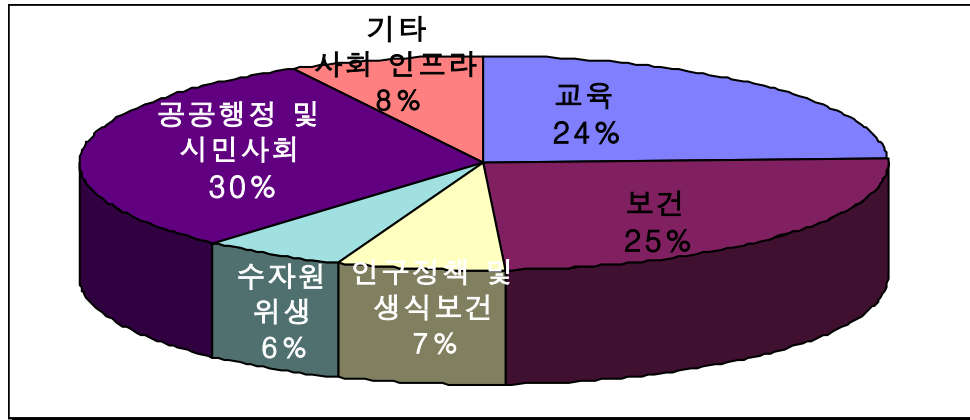
[분야별 현황]

분야별 지원 현황(약정 기준)

(백만불)

구분	사회인프라	경제인프라	생산부문	다부문	인도적지원	기타	합계
금액	494.59	10.07	65.93	37.95	178.04	144.11	930.69
비중(%)	53.1	1.1	7.1	4.1	19.1	15.5	100.0

- '08년 순지출 기준 아일랜드의 양자간 원조에서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53.1%(495백만불)로 가장 크며, 그 중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분야(151백만불)와 보건 분야(123백만불)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08년 아일랜드의 인도적 지원은 전체 양자간원조(분야 미배분 제외)에서 19.63%(178.04백만불)로 두 번째로 크며, 생산(산업)부문이 7.27%(65.93백만불)로 그 다음을 차지함
- DAC은 2009 Peer Review에서 아일랜드가 농업/농촌개발 및 민간부문에 대해 상대적으로 원조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빈곤대책반(Hunger Task Force)에서 동 분야에 대한 연구 및 지원을 활발히 해줄 것을 기대

[언타이드 현황]

- 아일랜드는 이미 모든 원조를 100% 언타이드로 제공하고 있으며, 언타이드 원조 모범국으로서 다른 EU공여국들과 언타이드 제도 및 이행에 있어서 교훈 및 개선과제 등을 공유하고자 노력

- 언타이드 원조를 통해 아일랜드는 사업 비용의 절감 및 수원국 내 사업 활성화 등 원조 효과 제고

다. 다자간 ODA 현황

- 아일랜드는 원조채널에 대한 총체적 전략이 확립되어있지 않아 왔으나, 시민사회, 인도적 지원 및 다자간 원조 채널에 대한 원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08년 총 ODA의 29.9%인 397백만불을 다자간 원조에 지원
- 아일랜드의 다자간 원조는 '99년 약 97백만불 대비 지난 10년 동안 절대적인 수준에서 약 4배 증가하여 '08년에는 397백만불 기록
 - 아일랜드의 핵심 파트너로서 전통적으로 가장 큰 지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EC는 '08년 155백만불의 지원을 받았으며, 그 뒤로 UN기구가 133백만불로 지원 규모가 큼
 - 2003년 Peer Review 이래로 UN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기 시작하였고, UNICEF, UNFPA, UNHCR 등 UN기구들과의 다년간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하는 등 파트너십 강화에 주력하면서 최근 UN에 대한 다자원조가 크게 증가

※ UN 기구에 대한 다자간 원조 : '02년 40.9백만불 → '08년 133.4백만불

- DAC은 아일랜드의 다자기구 및 Global Fund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반면, EC 등 아일랜드의 중요한 다자기구 파트너의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확대 및 영향력 강화를 위해 인력 보충이 필요함을 강조

다자간 원조 현황(순지출 기준)

(백만불)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다자간원조	130.62	151.82	197.85	236.7	389.37	368.07	397.16
UN기구	40.89	56.18	61.82	74.86	110.76	134.64	133.38
EC	62.89	73.16	92.53	111.84	121.81	133.15	154.72
세계은행그룹	18.32	11.69	26.87	30.97	125.37	42.69	46.8
지역개발은행	-	-	-	-	19.03	10.44	10.68

5. 원조 효과성(Aid Effectiveness)

[원조효과성 정책]

- 아일랜드는 원조 효과성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다양한 정책 및 전략 문서에 명시함으로써 파리선언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2008 파리선언 모니터링 서베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요인으로 작용
- 아일랜드는 원조 백서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정책(2008), UN과의 기본협정 체결, Multi-Annual Programme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에 파리선언의 5대 원칙에 대응하는 정책 및 가이드라인 수립
- 한편 Irish Aid는 MDG 달성에 대한 Irish Aid의 기여 확대를 위해 "Action Plan for Irish Aid's Response to the Paris Declaration 2008-2010"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동 Action Plan에 아크라행동계획을 반영하는 작업 추진

[수원국 주인의식 및 원조 일치성]

- Irish Aid는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 분야별 전략/정책, 및 기타 공여국간 조화 체계(예: 공동지원전략) 등을 기초로 하여 국가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국가 주재 대사관에서는 직접 국가지원전략 수립 및 연계기금(Associated fund) 제안 등을 적극적으로 주도
- 또한 본부에서 다년도 국가지원전략에 따른 전반적 Financial Envelope를 승인하고, 국회에서 연간 승인액을 확정하는 반면, 실제 프로그램 편성 및 지출 책임은 현지에 위임
 - 본부와 현지사무소간 잦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지 사정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원조 효과성 제고에 기여
- 아일랜드는 수원국의 개발전략계획 주기에 맞추어 프로그램 국가에 대한 국가지원전략을 3년 주기에서 5년 주기로 확장하였으며, 이는 아일랜드의 원조예측성 강화에 기여

[원조 조화]

- 아일랜드는 지구적 차원에서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른 공여국 및 국제 원조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협력 및 조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비교우위에 따른 원조 분업 논의에 활발히 참여
 - 현지 주재 대사관들은 Nordic+ 그룹을 통해 공동지원전략 수립에 참여하고 있으며, Irish Aid는 다른 공여국과의 공동국가분석 및 공동 평가에 참여

- 2008 파리선언 모니터링 서베이 결과, Irish Aid의 공동국가분석 실적은 2005년 18개에서 2008년 22개로 증가

자 료 : 1. DAC Peer Review, Ireland 2009
2. Memorandum of Ireland, 2009 [DCD/DAC/AR(2009)1/10]
3. White paper on Irish Aid, 2006
4. DAC Report on Multilateral Aid, 2008 [DCD/DAC(2008)58/final]
5.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원조 정책, 외교통상부 2007
6. OECD 통계 웹사이트 <http://stats.oecd.org>
7. 스웨덴 정부 웹사이트 <http://www.gov.ie/>
8. 스웨덴 외교부 웹사이트 <http://www.foreignaffairs.gov.ie/>
9. Irish Aid 웹사이트 <http://www.irishaid.gov.ie/>
10. 아일랜드 의회(Oireachtas) 웹사이트 www.oireachtas.ie

작 성 : 서문근영 suhmoongy@koreaexim.go.kr, 김 기 혜 kkhmoon@koreaexim.go.kr

목차보기

ODA 자료 2

ODA 통합평가 지침 및 매뉴얼 제정

1. 제정 배경 및 경위

-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가 강화 및 관련 시스템 개선 요구 증대
 - 평가 강화는 파리선언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
 - * 주인의식(Ownership), 정책의 연계(Alignment), 공여국간 조화(Harmonization), 성과중심의 관리(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 공동책임무성(Mutual Accountability)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우리나라 ODA 평가강화, 통합평가체제 구축 및 독립적 평가문화 확립 권고 및 심사
 - 특별동료검토(Special Peer Review, '08.9월) - 독립적 평가문화 구축, 평가결과 공개 및 환류 권고 (Building a strong independent evaluation culture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ntegrating lessons from evaluations into future programmes, improving accountability by making evaluations public)
 - DAC 가입심사('09.6월) - ODA 공동 평가가이드라인 수립 여부 확인, 성과중심 관리 및 사업평가 결과 feedback 시스템 보유 여부 심사, 평가결과의 외부 공개 여부 심사 (Establishment common evaluation guideline and a single evaluation manual for all ministries and agencies involved in Korean ODA, designing and managing projects for results, having internal feedback system, making evaluations available to the public)
- ODA 통합평가 체제 구축 착수
 - 통합평가체제 구축 결정 ('09. 5월, 제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09~'11년간 단계적으로 유·무상 원조 전체의 통합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선진 공여국 수준으로 우리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회) 산하기구로 평가지침 작성, 평가계획 수립, 연간 종합평가 등 총괄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소위원회**(평가소위)를 구성
- **통합평가 추진계획 논의** ('09. 7월, 제5차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 **추진방향** :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바람직한 ODA 정책 수립에 기여, 통합평가 시스템의 점진적·단계적 구축, 평가의 효과성·독립성·책임성 확보 강화, 평가 관련 예산 및 인력 지원 확대, 평가역량의 개선
 - **평가소위 구성** : 정부 및 민간위원
 - **세부 조치계획** : 통합평가지침 및 매뉴얼 작성, 통합평가 적용을 위한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수행방식 단일화, 시범평가 실시

2. 통합평가지침

□ 현황 및 필요성

- 사업수행 부처 및 기관 차원의 자체평가는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ODA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평가는 부재**
 - 각 부처 및 기관의 자체평가는 상이한 평가지침 적용
- 통합평가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통합평가의 정의와 주요활동 규정

□ 주요내용

- **목적** (제1조)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효율성** 제고
 -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

○ 평가의 정의, 원칙, 기준 및 종류 (제2~4조)

- 정의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계획→실행→결과에 대한 체계적, 객관적 측정
- 원칙* :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 유용성, 파트너십
- 기준* :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 * OECD DAC의 개발원조평가원칙(Principles for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1991) 준용
- 종류 : 정책 및 전략평가, 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 분야별·국별·주제별·형태별 평가 등

○ 평가소위 운영 및 평가협조기관 (제6~9조)

- 설치 및 구성 : 위원회 산하, 위원장(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 포함 15인 이내*
- * 당연직(정부부처·기관) 5인 :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장, 수출입은행 경협본부장, KOICA 이사
- * 위촉진(민간) 7인 : 시민사회, 학계, 경제계 등 전문가 (임기 3년)
- 역할 : 국제개발협력 관련 통합평가정책 수립, 정책·전략 및 국별 평가, 연간통합평가계획 수립, 사업수행기관 연간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심의,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및 점검 등
- 평가협조기관 : 기획재정부(유상), 외교통상부(무상)

○ 평가의 시행 (제11~14조)

- 연간통합평가계획 수립, 평가실시, 결과보고, 평가결과 심의 등

○ 평가결과의 활용 (제15~16조)

- 평가결과 공개(홈페이지, 보도자료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계획 수립 시 평가결과 반영, 세미나·간담회·토론회 등의 평가보고회 개최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향상과 제도개선에 기여

3. 통합평가매뉴얼

□ 현황 및 필요성

○ 통합평가 실무 가이드라인 필요

- 통합평가 수행을 위한 평가지침의 세부사항 규정 필요

○ 통합평가시스템의 효율적 운용 도모

- 통합평가 관련 기관인 평가소위·협조기관·사업수행기관 간 업무범위 명확화
- 통합평가시스템 운영 절차 구체화

□ 주요내용

○ 평가개요 (I 장)

- 평가의 정의, 목적, 종류, 원칙 상세기술

평가의 종류

실시 방법	내부평가 (Internal Evaluation, Self-Evaluation)
	외부평가 (External Evaluation, 3rd-party Evaluation)
	공동평가 (Joint Evaluation)
시기	사전평가 (Ex-ante Evaluation)
	중간평가 (Interim Evaluation)
	종료평가 (End-of-project Evaluation)
	사후평가 (Ex-post Evaluation)
대상	정책 및 전략평가 (Policy & Strategy Evaluation)
	국별 평가 (Country Programme Evaluation)
	분야별 평가 (Sector Evaluation)
	주제별 평가 (Thematic Evaluation)
	형태별 평가 (Modality Evaluation)
	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 (Project/Programme Evaluation)

평가의 원칙

- 공정성(Impartiality) :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의 입장 차이를 고려하며 편향된 입장이 반영되지 않도록 함
- 독립성(Independence) : 평가는 정책결정 및 사업시행과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수행, 평가팀은 평가대상을 객관적으로 조사, 분석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
- 신뢰성(Credibility) : 평가는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춘 평가자에 의해 투명한 절차를 거쳐 수행
- 유용성(Usefulness) : 평가결과는 국제개발협력 정책결정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함
- 파트너십(Partnership) : 협력대상국, 타공여국·기관 등 개발협력파트너의 평가 참여 장려

○ 통합평가시스템 (II 장)

- 관련기관 : 평가실시기관(평가소위, 사업수행기관), 협조기관(재정부, 외교부)

- 운용절차

사업수행기관	기관별 연간평가계획 수립	1월 말
협조기관	무상·유상 기관별 연간평가계획 접수·종합	2월 중
평가소위	연간통합평가계획 수립 및 확정	2월 말
평가실시기관	평가업무 수행 (평가 기획/실시/종료)	연중
협조기관	각 기관별 평가보고서 접수·종합	차년도 1월말
평가소위	평가결과 심의	차년도 2월말
평가실시기관	feedback 계획 작성	차년도 3월 중
평가소위	feedback 계획 심의 및 확정	차년도 3월 말
사업수행기관	feedback 계획 사업반영	차년도 연중

- 연간통합평가계획 수립 : (사업수행기관) 연간평가계획 수립 → (평가소위)
각 사업수행기관별 연간평가계획 심의 및 연간
통합평가계획 수립

- 평가업무 수행

1. 평가기획	평가준비 평가계획수립 평가팀 선정
2. 평가실시	사전조사실시 상세 평가계획수립 현지평가실시 현지평가결과보고
3. 평가종료	평가보고서(안) 작성 평가보고서(안) 심사 평가보고서 확정

- 평가결과 심의 및 환류 : (평가소위) 평가결과 심의 → (사업수행기관)
평가결과반영계획 수립 → (평가실시기관)
평가결과반영 (feedback)
- 평가결과의 공개 : 홈페이지 · 보도자료 등 활용, 평가보고회의 개최

○ 평가기준 (Ⅲ장)

- OECD DAC 5대 평가기준 및 각 기준별 표준 질문 수록
평가기준

- 적절성(Relevance) :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협력대상국의 필요와 우선순위 및 우리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정도
- 효율성(Efficiency) : 투입된 자원(인력, 시간, 비용 등) 대비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성과가 경제적 의미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나타났는가의 정도
- 효과성(Effectiveness) : 목표 달성도 (output, outcome)
- 영향력 (Impact) : 직 · 간접적으로 초래된 지역적 · 사회적 · 경제적 · 환경적 · 문화적 긍정적/부정적 변화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국제개발협력사업 종결 후에도 사업의 효과가 지속되는 정도

○ 평가방법 (Ⅳ장)

- 평가분석과정

평가기준	평가질문	평가도구	결 론	교훈 및 제언
DAC 기준	각 기준별 세부질문 개발	세부질문별 조사방법론 선정 및 조사 실시	조사결과 종합 · 정리 및 분석	결론을 바탕으로 제언 도출
상세평가계획 수립		상세평가계획 수립, 서면/현지조사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 평가방법론 : 문헌조사, 직접관찰, 설문조사, 인터뷰, 그룹토의, 사례조사, 지수조사, SWOT 분석

4. 향후 추진계획

- ☐ 통합평가지침 및 매뉴얼 최종 확정 및 보고 ('09. 12, 국제개발협력위)
- ☐ '10년 시범통합평가 실시
 - '10. 1~2 시범통합평가 계획 수립
 - '10. 3~10 시범통합평가 실시
 - '10. 11 시범통합평가 결과 심의
 - '10. 12 시범통합평가 결과 반영, 통합평가체제 점검
- ☐ '11년 통합평가 본격 실시

작 성 : 강 유 라, yura@koreaexim.go.kr

목차보기

EDCF 소식

2009년 4/4분기 EDCF 소식

1. 2009년 4/4분기 중 주요 사업 개요

① 정부지원방침 결정

□ 베트남 빈틴 교량 건설사업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베트남 재무부 (베트남 교통부)
- 총 사업비용 : 137백만 달러
- 지원신청금액 : 100백만 달러
- 사업범위 : 홍강 상류지역에 총연장 4.4km의 교량 건설
 - 주교량 880m, 보조교량 3,533m
 - 교량 접속부 연결도로(1.1km) 건설
- 사업개요
 - 하노이를 중심으로 하는 홍강델타 지역은 호치민, 메콩델타 지역과 함께 베트남 3대 산업기지 지역으로, 최근 3년간 18%의 연평균 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기존 교통망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급격히 증가하는 도로교통량 충족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도로망 확충, 특히 홍강으로 분리된 남북지역의 접근성 증대가 시급한 상황
 - 본 사업은 하노이시의 홍강 횡단교량 및 연결도로 인프라 건설을 통해 하노이시 중심의 환상형 교통축을 형성함으로써 홍강델타 지역의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 및 수도권 개발을 촉진함과 동시에 베트남 서북부지역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009년 2월 양국정부 정책협의를 시 본 사업을 '09년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2009년 11월 정부지원방침 결정)

□ 콜롬비아 ICT R&D 센터 건립사업

- 차주 (사업실시기관) : 콜롬비아 재무공공신용부 (콜롬비아 통신부)
- 총 사업비용 : 15,500천 달러
- 지원신청금액 : 10,000천 달러
- 사업범위 : - ICT R&D Center의 건립
 - IPTV와 Digital Contents 에 대한 기술이전
 - 교육 훈련 및 컨설팅 서비스
- 사업개요
 - 현재 콜롬비아는 정부의 강력한 ICT 개발의지에도 불구하고, ICT 개발정책의 추진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ICT 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ICT R&D 센터 건립,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통한 기본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인 상황
 - 본 사업은 ICT 부문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임과 동시에, 동 센터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모태로 한 ICT 특성화 분야 기술개발, 개발된 기술에 대한 콜롬비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제품의 상용화 등 콜롬비아 ICT 산업의 발전과, 관련기술 및 제품에 대한 수입대체 및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008년 9월 및 2008년 11월, 두 번의 EDCF 차관요청 이후 2009년 11월 정부지원방침 결정

□ 콜롬비아 ICT 교육역량 강화사업

- 차주 (사업실시기관) : 콜롬비아 재무공공신용부 (콜롬비아 교육부)
- 총 사업비용 : 36,000천 달러
- 지원신청금액 : 총 30,000천 달러
- 사업범위 : 콜롬비아의 ICT 기반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국가·지역 혁신센터 구축, e-Portal 고도화, 교육 콘텐츠 개발, 교원 연수, 컨설팅 서비스 등
- 사업개요
 -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개발계획 상 교육부문 투자 및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계층 간 교육격차 및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을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공교육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에 충당되고 시설투자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공교육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
 - 본 사업에서는 국가혁신센터(NIC) 및 지역혁신센터(RIC)의 구축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초·중등학교 교육정보화 지원으로 공교육의 질 향상 및 지역·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e-Portal 개발 및 고도화를 통한 학교현장의 ICT 활용 촉진과 대국민 교육 서비스 향상 등의 효과 기대

□ 인도네시아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차주 (사업실시기관) : 인니 재무부 (인니 법무인권부)
- 총 사업비용 : 39,088천 달러
- 지원신청금액 : 33,000천 달러
- 사업범위 :
 -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행정업무를 전산화하는 특허행정시스템 구축
 - 특허정보검색을 위한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 교육·운영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서비스 등

○ 사 업 개 요

- 현재 인니의 경우 지식재산권의 출원이 서류제출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므로 출원인의 시간 및 비용측면의 낭비가 심하고, 인니 특허청의 후진적 심사 방식으로 심사소요기간이 길어 출원인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바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출원자 및 사용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효율적인 특허행정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
- 사업은 향후 특허 출원건수의 증가에 대비하고 현행 특허행정 프로세스를 개선할 목적으로 특허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특허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민서비스를 향상하는 효과가 기대
- 2008년 12월 인도네시아 정부의 EDCF 사업심사요청서(Pre-request) 제출 후 2009년 11월 정부지원방침 결정

□ 볼리비아 바네가스 교량건설 사업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볼리비아 개발기획부 (볼리비아 도로청)
- 총 사업비용 : 49,910천 달러
- 지원신청금액 : 41,061천 달러
- 사 업 범 위 : 볼리비아 10번 국도 지역의 오키나와~로스트롱코스 구간을 연결하는 총연장 1.44km, 폭 11m의 왕복 2차선 교량 건설, 컨설팅 서비스 등

○ 사 업 개 요

- 볼리비아 산타크루스주는 브라질, 파라과이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산업·물류 이동의 중심지로,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1%에 이르는 등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기존 교통망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급격히 증가하는 도로교통량 충족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도로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

- 본 사업은 칠레와 브라질을 연결하는 「남미 태평양-대서양 횡단도로」와 볼리비아 남동부 산타크루스 지역을 통과하는 10번 국도 연결을 위한 교량 건설을 통하여 볼리비아의 유럽 및 브라질 앞 수출증진 및 경제발전에 기여, 볼리비아 산타크루스 주의 농축목지 및 석유가스 개발 운송 증대로 지역 경제발전을 촉진, 기존 4번 국도의 교통혼잡 해소로 물류 시간 및 비용 절감 도모의 효과 기대
- 2009년 2월 볼리비아 정부의 아국정부에 대한 EDCF 차관 요청 이후, 2009년 11월 정부지원방침 결정

□ 모잠비크 나칼라 연결도로 개보수 1차 사업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모잠비크 재무부 (모잠비크 도로청)
- 총 사업비용 : 264,168천 달러
- 지원신청금액 : 20,000천 달러
- 사업범위 : 나칼라 연결도로 중 모잠비크 내 남폴라~쿠암바 구간 348km에 대한 도로 (교량 포함) 개보수
- 사업개요
 - 본 사업구간인 나칼라 연결도로는 모잠비크 북부 경작 지역과 주변 지역, 나아가 동부 나칼라항과 내륙국가인 말라위, 잠비아를 연결하는 중요 수송로로서 수원국 및 인접국가에서의 사회·경제적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나, 비포장 상태인 현재의 도로는 우기에 통행이 어려워 이로 인한 운송비 및 교통비 상승이 인근 지역 및 인접 내륙국가에 대한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빈곤감축 노력의 효과가 반감되고 경제 성장에 저해가 되고 있는 상황
 - 본 사업을 통해 잠비아, 말라위 및 모잠비크 북부 지역과 나칼라항 간 도로 여건 개선, 국가간(cross-border) 및 국제(international) 무역 촉진을 통한 경제 성장, 사업실시지역 주변 주민들의 접근성 제고를 통한 빈곤 감축의 효과가 기대

- 2009년 4월 AfDB가 EDCF 앞 Joint 방식 협조융자 참여 제안, 2009년 7월 모잠비크 정부로부터 차관요청서 접수 이후 2009년 11월 정부지원방침 결정

② 차관공여계약 체결

□ 카메룬 직업훈련센터 건립사업

- 차주 (사업실시기관) : 카메룬 경제기획지역개발부 (카메룬 직업훈련고용부)
- 총 사업비용 : 48,400천 달러
- 지원신청금액 : 35,000천 달러
- 사업범위 : Douala, Limbe, Sangmelima 등 3개 지역 직업훈련소 건립, 교육기자재 공급, 교육·훈련 (전문가 파견 및 교직원 초청연수)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 사업개요
 - 카메룬은 '00년 IMF의 국가빈곤극복전략계획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산업인력양성을 국가발전전략의 우선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04년 기술·직업훈련, 일자리 창출 및 고용업무를 전담할 직업훈련고용부를 창설하고 인적자원개발 관련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직업훈련 분야 수준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
 - 본 사업은 중등학교 졸업 이상의 비진학자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산업체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함으로써 실업률 감소, 빈곤퇴치, 인적자원개발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기대됨
 - 2006년 3월 카메룬 정부에 의한 직업훈련소 건립사업건 EDCF 차관지원요청 접수 후, 2009년 11월 차관 계약 체결

□ 베트남 호치민~쑹롱 고속도로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베트남 재무부 (베트남 교통부)
- 총 사업비용 : 35백만 달러
- 지원신청금액 : 30백만 달러
- 사업범위 : 호치민~쑹롱 고속도로 (4차선, 총연장 53.1km-접속도로 포함) 운영관리를 위한 '통행료징수시스템(TCS)', '교통관리 시스템(TMS)' 구축 및 교통관리센터 등 부속건물 건설
- 사업개요
 - 현재 베트남은 도로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이에 대한 즉각적인 공급이 어려워 호치민, 칸토 등 남부지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교통 혼잡상태에 직면하고 있고, 근무자의 육안판단에 의한 차종 구분에 따라 일정요금을 징수하는 개방식 체계로 인해 차량의 도로 진·출입 통제가 어렵고 이에 따른 통행료 누수가 빈번할 뿐 아니라, 인력 과다투입 및 요금수납 관리의 투명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체계화된 교통정보의 수집기반도 취약한 상황
 - 본 사업은 베트남 도로분야에 지능형 교통시스템 최초 도입을 통해 신설 고속도로 전반에 대한 시스템 보급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교통부문의 현대화 및 선진화, 주변지역 교통 혼잡 해소 등을 통한 호치민시 주변 지역의 개발 촉진 및 국제도시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009년 5월 베트남 정부의 EDCF 지원요청에 따라 사업 지원 결정(2009년 10월 정부지원방침 결정, 2009년 10월 차관공여계약 체결)

□ 베트남 목짜우 상하수도 건설사업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베트남 재무부 (손라성 인민위원회)
- 총 사업비용 : 16,225천 달러
- 지원신청금액 : 12,980천 달러
- 사업범위 : 손라 성 목짜우 및 목짜우 농장 읍 내 상하수도 시설
건설에 필요한 정수처리장, 하수처리장, 관로공사
및 컨설팅 서비스 등의 재화 및 용역 구매
- 사업개요
 - 본 사업 실시지역인 손라 성(Son La Province)은 산간 농촌지역으로서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상하수도 보급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물 부족 및 수인성
질병 위험에의 노출이 심한 실정
 - 본 사업은 목짜우 지역에 상하수도 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안전한 음용수
공급과 현대식 하수처리에 따른 공중보건 및 복지 증진, 고원지대 특성에
맞는 목축업과 관광업 개발 촉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 2008년 4월 베트남 정부의 EDCF 지원요청서 제출 후 2009년 10월 차관계약
체결

□ 베트남 탕화성 탕화시 직업기술대학 개선사업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베트남 재무부 (탕화성 인민위원회)
- 총 사업비용 : 4,285천 달러
- 지원신청금액 : 3,143천 달러
- 사업범위 : 현재 증축 중인 탕화성 직업기술대학에 필요한 교육훈련
기자재 및 유지보수(1년) 등의 재화 및 용역 구매

○ 사 업 개 요

- 근래 탕화성의 경제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 곳곳에 산업 단지가 조성되어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고 인근 Le Mon - Dinh Huong 산업단지 내의 인력 수요만 해도 4만명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탕화시 직업훈련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탕화성 직업훈련대학에 최신 기자재 부족 등으로 증가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
- 본 사업은 현재 증축 중인 탕화성 직업기술대학에 교육훈련 기자재를 지원함으로써 숙련된 기능 인력의 양성 및 산업발전, 국가경제 활성화 도모 기대
- 2008년 7월 베트남 정부의 EDCF 지원요청서 제출 후 2009년 10월 차관 계약 체결

③ 구매계약 체결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병원 현대화 사업(2차)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재무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연합 보건부, 스르프스카 공화국 보건사회복지부)
- 총 사업비용 : 62.5백만 달러
- 지원신청금액 : 50백만 달러
- 사 업 범 위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국립 임상센터 및 종합병원의 의료 장비 및 부속시설·설비 구매, 장비 공급을 위한 병원정비, 운영 및 유지보수
- 사 업 개 요
 - 전후 소실 및 낙후된 병원에 최신의 주요 진단 및 일반 의료장비를 공급 함으로써, 병원 현대화를 꾀하고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기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

- 2007년 10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의 EDCF 차관신청 접수 후, 2009년 2월 차관계약 체결 및 2009년 10월 구매계약 체결

□ 베트남 투아티엔훤 종합병원 건립사업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베트남 재무부 (투아티엔훤성 인민위원회)
- 총 사업비용 : 38,601천 달러
- 지원신청금액 : 30,862천 달러
- 사업범위 : 투아티엔훤성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의료기자재 구매, 교육훈련, 사업준비 및 부지정비 등
- 사업개요
 - 투아티엔훤성은 베트남 중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베트남 전쟁의 피해를 심각하게 입어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된 지역인데다 건기 가뭄, 우기 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고 열악한 보건의료 인프라로 인해 의료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실정
 - 본 사업은 투아티엔훤성에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설하고 의료기자재를 공급함으로써 투아티엔훤성 및 인근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환경 개선 도모 효과 기대
 - 2006년 10월 베트남 정부의 EDCF 차관 신청서 접수 후 2007년 8월 차관계약 체결 및 2009년 10월 구매 계약 체결

□ 베트남 닌빈 고체폐기물 처리사업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베트남 재무부 (닌빈성 탐디엵 도시환경공사)
- 총 사업비용 : 26,300천달러
- 지원신청금액 : 20,970천 달러

- 사업 범위 : 퇴비생산시설(200톤/일), 폐기물 위생 매립장(6ha) 건립 및 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 시스템의 개선 등
- 사업 개요
 - 현재 닌빈성은 지방경제의 활성화로 폐기물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기존 매립장마저 사용 연한이 한계에 다다른 실정임. 또한 환경오염에 의한 지역주민의 위생 및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태
 - 본 사업은 닌빈성 고체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 전과정의 통합 처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닌빈성 산업/가정폐기물의 효과적인 통합처리 방안 확립뿐 아니라 기존 매립방식으로 야기되는 각종 환경오염(수질 및 공기) 문제 감소 효과 기대
 - 2003년 9월 베트남 정부의 EDCF 지원요청서 접수 이후, 2004년 10월 차관계약 체결 및 2009년 10월 구매 계약 체결

2. EDCF 업무통계 요약(2009.11.31 현재)

□ 연도별 승인 및 집행 현황

- 최근 4년간 승인, 집행,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억 원)

연 도	승 인*	집 행	기금조성(누계)
2006년	3,941	1,361	19,238
2007년	7,049	1,553	21,169
2008년	11,870	2,371	23,060
2009년(11월말)	5,456	2,361	24,650

* 적용환율: KRW1,174.32/U\$

○ 승인 및 집행 누계

- 승인 : 46국 216개 사업, 5조1,898억원('09년 : 8개국 16개사업, 5,456억원 포함)
- 집행 : 39국 161개 사업, 2조2,464억원('09년 : 21개국 46개사업, 2,361억원 포함)

□ 지역별, 부문별 승인 및 집행 누계 (1987~2009.11)

○ 지역별 승인 및 집행 누계

(단위 : 억 원)

지 역	승 인		집 행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아 시 아	35,962	69.3%	14,930	66.5%
유 럽	3,992	7.7%	3,053	13.6%
아 프 리 카	6,295	12.1%	2,421	10.8%
중 남 미	3,472	6.7%	1,405	6.3%
중 동	2,011	3.9%	574	2.6%
대 양 주	165	0.3%	82	0.4%
합 계	51,898	100.0%	22,464	100.0%

○ 분야별 승인 및 집행 누계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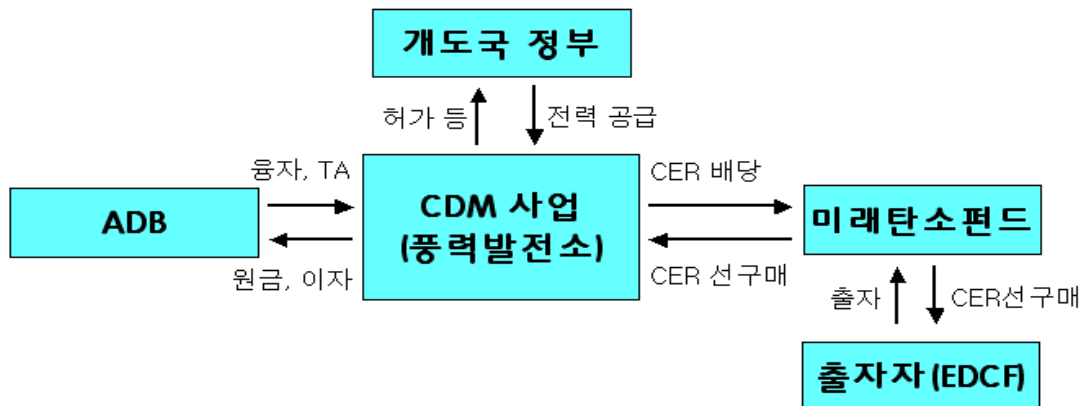
분 야	승 인		집 행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교 통	17,255	33.2%	6,524	29.0%
통 신	5,338	10.3%	3,482	15.5%
에 너 지	5,499	10.6%	2,370	10.6%
수자원, 위생	8,326	16.0%	2,645	11.8%
환 경 보 호	231	0.4%	148	0.7%
보 건	5,300	10.2%	2,287	10.2%
교 육	4,306	8.3%	1,464	6.5%
공 공 행 정	2,127	4.1%	1,767	7.9%
농 수 입	1,897	3.7%	1,084	4.8%
기 타	1,619	3.1%	693	3.1%
합 계	51,898	100.0%	22,464	100.0%

3. EDCF 동향

[EDCF-ADB간 미래탄소펀드 참여협정서 체결]

□ '09년 11월 EDCF-ADB간 미래탄소펀드 참여협정서 체결

- 일 시 : 2009.11.13(금)
- 장 소 : ADB(마닐라, 필리핀)
- 서 명 자 : (출자자)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 (실행기관)당행 경협 기획실장, (수탁자)ADB 담당국장
- 주요내용 : 매년 500만달러씩 2010~2013년간 총 2,000만불 출자
- 미래탄소펀드의 사업 내용



※ CER : Certificate Emission Reduction(탄소배출권)

- EDCF의 미래탄소펀드 참여에 따른 기대효과
 - Post-교토 협약에 따른 의무감축국 지정 시 부족한 CER 보충
 - 非의무감축국 유지 시에도 확보된 CER 매각을 통한 수익 확보
 - 해외 CDM관련 부족한 국내탄소금융에 대한 Know-how 습득
 - 우리정부의 아시아 역내 녹색금융 선도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 습득된 정보를 활용 국내 유관기업의 해외 CDM 사업진출 지원 가능

[우리나라 통계자료집 발간]

☐ 발간 배경 및 목적

- '10년 아국의 DAC 가입 및 최근 정부부처, NGO, 학계 등의 ODA 사업에 대한 관심 고조로 인한 ODA 통계 수요에 대응
- ODA 통계 자료의 외부 공개를 통해 정보수요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내부적으로는 ODA 통계업무의 효율성 제고

☐ '우리나라 ODA 통계자료집'에서는 '00년 이후 아국의 ODA 지원 현황 및 '00년 이후 DAC 회원국들의 ODA 지원 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으며, '10년 상반기에는 'ODA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예정

[ODA 통합평가체제 구축]

☐ 추진배경 및 향후 계획

- '08년 9월 OECD DAC의 특별동료검토(Peer Review)시, 우리 정부의 ODA 통합평가체제 구축 및 독립적 평가문화 확립 권고가 있었고, 아국 스스로도 DAC 가입 및 ODA 규모 확대 추진 등의 위상에 걸맞는 평가제도의 필요성
- '09년 12월 중 통합평가매뉴얼을 확정하고, '10년 1~2월 중 시범 통합평가계획 수립 후 '10년 3~10월 중 시범 통합평가를 실시하고 '10년 11~12월 중 시범통합평가 결과 반영 및 통합평가체제 점검 예정

☐ 통합평가 지침 및 매뉴얼 주요 내용

- 평가 지침 : 평가의 목적·정의·원칙·기준·종류, 평가소위 구성 및 역할, 협조기관 지정, 평가결과 활용

- 평가매뉴얼 : 평가의 개요·기준·방법·구체화, 평가시스템(기관 및 운용 절차)의 상세화

[제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 개요

- 일시 : '09.12.18(금)
- 장소 : 정부중앙청사
- 참석자 : 정운찬 국무총리 외 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및 수출입은행 은행장, KOICA 이사장 외 민간 위원들

☐ 주요 내용

- 유상원조를 전년대비 34.3% 확대 및 무상원조 전년대비 17.8%로 확대하는 등의 2010년도 ODA 추진계획 수립 및 범정부적 ODA 홍보 강화 방안 수립
- '10년 상반기 중 유·무상 30개국 이내로 중점협력국 단일화 및 '10년 중 3개국에 대한 통합국별지원전략 수립 완료 외에도 ODA 통합평가 추진 현황 보고

[기획재정부 '10년 한국형 ODA모델 추진계획 발표]

☐ 추진배경

- DAC 가입을 통해 우리 경제규모에 걸맞은 원조체계를 구축해야 하나 선진국 수준으로 규모를 급격히 확대하는 데 한계
- 원조를 받아 경제발전에 성공한 유일한 사례로서, 특유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수원국의 경제적 우호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한국형 ODA 모델 개발 필요성 대두

☐ 주요내용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20개의 대표사업(Star Experience Program)*으로 모듈화하여 개도국에 전수
 - * Star Experience Program : 중화학 육성정책, IT 산업육성, 녹색산업육성, KOTRA 및 종합무역상사제도, 수출입은행 및 수출보험공사 설립, 수출자유공단 설치, WTO 가입전략 등
- 발전경험 및 기술전수(S/W)와 원조자금(EDCF, KOICA)을 이용한 인프라 구축(H/W) 지원을 병행
 - 유·무상 연계 강화를 위해 사업추진 단계별로 유기적 연계지원 강화
- 선택과 집중에 따라 유·무상(EDCF, KOICA) 통합 중점지원국을 30개 내외로 선정, 일반지원국도 60개 내외로 축소

[국제개발협력법안 법사위 통과]

☐ 개요

- '09.12.24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 '09.12.28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 통과

☐ 주요 내용

- 원조의 정의
 - 양자간 개발협력은 무상협력과 유상협력으로 구분
 - 다자간 개발협력은 유·무상 구분 없이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출자 및 양허성 차관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

- 원조의 기본 정신 및 목표 규정
 - 개도국의 빈곤감소, 여성 및 아동의 인권향상과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 증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추구 등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관련 법률의 제·개정시,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 정신 준수

작 성 : 조 은 진, ejcho@koreaexim.go.kr, 김 기 혜, kkhmoon@koreaexim.go.kr

목차보기

국내외 ODA 소식

국내외 ODA 소식

(2009. 11. 1 ~ 2009. 12. 24)

[KDI-World Bank 경제개발 합동 컨퍼런스 개최(11.4, 연합뉴스)]

- 11.4~11.5, KDI와 World Bank가 공동으로 기획재정부, ADB, OECD, 아시아재단 등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합동 컨퍼런스를 개최
 - 주제 : 경제개발을 위한 지식공유 - 성과측정과 평가를 중심으로
 - 지식집약적인 ODA 모형 정착과 성과측정 및 평가체계 개선을 위해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관련 국내외 전문가 및 국제기구 간 연구결과와 경험 공유

[제3회 ODA국제컨퍼런스 개최(11.4, 연합뉴스)]

- 11.4~11.5, 외교부, KOICA, 독일 BMZ,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올펜손개발센터 등이 공동으로 '제3회 ODA국제컨퍼런스' 개최
 - 주제 : 국제개발협력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
 - 신각수 외교통상부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ODA의 세계적인 공조 필요성과 한국 정부의 2015년 GNI 0.25% 수준의 ODA 규모 확대를 언급

[아프리카에 기후변화 관련 11억달러 지원(11.5, World Bank 홈페이지)]

- CIF(Climate Investment Funds)*, 아프리카 국가들에 기후 변화 관련 11억달러 지원

* CIF : 2008년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로서, 10개 선진국이 조성한 금액은 60억달러(미국 20억달러, 영국 15억달러, 일본 12억달러, 독일 8억달러 등)이며, World Bank, AfDB, ADB, IDB 등 MDB들이 실행기관임

- 이집트, 모로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풍력, 저탄소 교통 시스템 등 에너지 관련 사업을 위해 총 9억 5천만 달러 대출
- 모잠비크, 니제르, 잠비아 등 기후 변화에 취약한 나라를 지원하기 위해 약 5천만~7천만 달러의 금액을 무상 및 저리로 지원

[한-중남미 고위급포럼 개최(11.10, 동아일보)]

- 11.10~11.11간 열린 한-중남미 고위급 포럼에서 정부는 ‘한-중남미 경제협력 확대 방안’ 및 녹색 ODA 비중의 확대안을 발표
 - 정부는 중남미 국가와 FTA체결을 확대하고, 2012년까지 2,600억원 규모의 EDCF를 제공할 예정
 - 콜롬비아와 FTA 협상을 조기에 개시하고, MERCOSUR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공동협약체 설립 예정
 - 수출입은행과 IDB간 MOU를 체결하여 바이오에너지, 풍력 등의 사업에 대해 협조 용자 추진
 - EDCF 2,600억원을 볼리비아와 과테말라 등에 지원할 예정
 - 정부는 EDCF 등을 통해 현재 14%인 녹색 ODA 비중을 2020년까지 30%로 확대할 예정

[제2회 한-필리핀 개발협력 포럼 개최(11.8, 한국경제)]

- ‘제2회 한·필리핀 경제협력포럼’, 수출입은행과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 공동으로 개최
 - 마리사 세레조 필리핀 에너지부 부국장은 필리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 참여를 부탁
 - 김동수 수출입은행장은 한국과 필리핀의 녹색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

[‘국격제고를 위한 ODA 정책’ 보고서 발간(11.11, 머니투데이)]

- 삼성경제연구소의 ‘국격제고를 위한 ODA정책’ 보고서, 국격제고를 위해 ODA 규모 확대 및 홍보 강화 필요성 제기
 - 한국은 1999년까지 모두 128억불(2005년 불변가치로 460억불)의 ODA를 지원받은 반면, 해외원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외환 위기 이후 10년간 지원 규모는 40억불에 불과
 - 보고서는 ODA규모 확대(2015년까지 GNI의 0.35%인 43억불 규모)와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ODA 확대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제안

[중국, 아프리카에 100억불 지원(11.9, 한국일보)]

- 중국 원자바오 총리,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에 100억불 규모의 차관 제공 발표
 - 아프리카 저개발국에 대해 ‘제로 관세’혜택을 확대하고, 아프리카가 기후 변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100개의 클린 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
 - 이에 대하여, 서부 유럽 국가들은 중국이 자원 획득을 위해 민간인을 학살한 기니 군사정부에 자금을 대는 등 독재국가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

[일본, 메콩강 5개국에 5,000억엔 지원(11.9, 조선일보)]

- 하토야마 총리, 도쿄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메콩 지역 5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내년부터 3년간 ODA 5,000억엔 지원하기로 결정
 - 중국이 메콩강 지역에 영향력을 급속히 확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견제의 일환
 - 5개국 항구와 공항·송유관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지원, 지구온난화 대책 지원 등을 추진

[내년 ODA 선진화 원년 삼을 것 외(11.16, 매일경제)]

- 정부는 기여외교 강화를 위해 2010년을 'ODA 선진화 원년'으로 설정
 - 정부는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격외교', '기여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외통부는 내년 예산안 중 국제기구분담금을 42% 증액, 무상원조 예산을 19.4% 증액하기로 결정
 - 정부는 ODA/GNI 규모를 2008년 0.09%에서, 2012년 0.15%, 2015년 0.25%까지 확대할 방침('08년 기준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ODA/GNI는 평균 0.3% 수준)
 - 이는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

[기여외교 시대, 지원도 '잠재' 투자(11.15, 국민일보)]

- ODA 분야가 국내 외교가 사이에선 '블루오션'이나, 국민 인지도는 아직 낮아, ODA가 인도주의 '명분'과 국익 '실리' 동시 추구의 수단임을 홍보해야 함
 - 미국은 자본주의적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안보 차원의 수단으로 ODA 사용
 - 일본은 ODA를 수출시장 확대와 원자재 안정적 공급의 수단으로 이용
 - 경제규모 대비 세계 최고의 ODA 클럽으로 분류되는 북유럽 3국은 ODA를 이용하여 외교 역량과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실리 추구
 - ODA는 수원국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협력파트너인 개도국에 대한 투자이며, 아국의 지속성장을 위한 수단임을 인지
 - 'ODA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대외원조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를 제고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AfDB, 아프리카 국가의 공공조달시스템 개혁(11.18, AfDB 홈페이지)]

- AfDB는 튀니지에서 아프리카 국가 간 고위급 포럼을 개최, 공공 조달시스템 개혁을 위한 튀니지 선언문을 채택
 - 공공조달시스템의 제도적 개선을 통한 공공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를 목적으로, 아프리카 국가 간 조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향후 모범 사례를 교환하기로 약속
 - 시스템 개혁을 위한 각 국가의 제도적 능력 부족 및 정치적 의지 부족이 도전 과제로 지적됨

[메콩강 유역 5국서 '카터 집짓기 행사' (11.16, 연합뉴스)]

- KOICA, 메콩강 유역 5개국에서 '지미&로잘린 카터 워크 프로젝트'의 빈곤층을 위한 집짓기 행사 참가
 - 태국,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5개 지역에서 전 세계 4천명의 자원 봉사자가 참여하는 집짓기 프로젝트에 KOICA 봉사단원과 임직원이 참가
 - 본 행사는 메콩강 유역 5개국의 빈민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5만 세대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할 계획

[중동에 공들이는 佛, 대이라크 협력강화(11.17, 연합뉴스)]

-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이라크 잘랄 탈라바니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갖고, 빈곤퇴치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경제 협정서 체결
 - 프랑스는 대외원조기구인 프랑스개발청(AFD)의 이라크 사무소를 신설 하고, 빈곤퇴치, 농업발전 지원, 전쟁으로 파손된 유물 복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결정
 - 이는,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중동지역에서 미국과 영국의 이미지가 악화되자 프랑스의 위상을 강화하여, 이라크의 미개발 유전을 확보하고 군수 용품을 수출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

[농업 분야 대외원조 확대(11.17, 머니투데이)]

- ☐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 UN 식량농업기구(FAO) 기조연설에서 세계 식량안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농업 분야 대외원조 확대 약속
 - 아시아 지역에 비상 비축용 쌀을 15만톤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 개도국 식량 위기 대비를 위해 곡물가격 변동원인에 대한 국제 공동 연구를 제안

[매일경제신문 ODA 기획 시리즈, 받는 외교서 주는 외교로]

(1) 선진국클럽 DAC 24번째 멤버로 가입(11.23)

- ☐ 11.25일 프랑스 파리에서 OECD 산하 DAC은 특별회의를 열고 한국을 24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예정

(2) 제2차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11.24)

- ☐ 제2차 한·아프리카 포럼'에서 2012년까지 아프리카 ODA 규모를 2배 이상으로 늘리는 '서울선언 2009' 채택

(3) 우리나라의 對필리핀 ODA 지원실적 및 사업현장(11.25)

- ☐ 對필리핀 ODA 규모, 2007년 1,400만불에서 2009년 1억 9,750만불로 급증하는 추세
 - 이는 이명박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 전략에 따라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에 ODA를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기인
 - EDCF 이자율 하락 등 차관조건이 개선되었으며, EDCF는 올해 1억 8,700만불을 필리핀에 지원할 예정

(4) 공여국간 對베트남 '차관제공' 경쟁(11.30)

- ☐ '07년 공여국들의 對베트남 원조액은 30억불에 달하며, 이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인도에 이어 네 번째임

- 베트남은 높은 경제 잠재력에 공무원들의 부패 정도가 덜하고 원조 효과가 확실한 것이 이유
-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원조액은 2003년 600만불에서, 2007년 3억불, 2008년 2억 4천만불로 급증
- 라컨딩안 공항, 공항 활주로 등 토목공사 분야에 EDCF 3,060만불 규모를 지원하였으며 2011년말 완공 예정으로 공사 진행 중
 - 라컨딩안 공항은 공항운행시스템 및 항공관제시스템까지 한국에 맡기기기로 결정하고 추가 지원을 신청
 - EDCF를 통해 토목공사 뿐만 아니라 운항시스템까지 지원하여 공항 전체를 지어주는 최초의 사례
- 마닐라 남부 통근 철도, EDCF 3,500만불이 지원되었으며 내년 4월 개통 예정
 - 철로 주변 주민 이주 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일본이 포기했던 사업으로, 한국이 ADB 이주전문가를 고용해 판자촌이던 34,000가구를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으로 이동시키며 건설 사업을 속개한 성공 사례

[아프리카 원조확대의 경제적 의미(11.26, MBC)]

- 對아프리카에 대한 ODA를 지금의 2배 규모인 2억달러로 확대할 예정
 - 아프리카는 정치가 안정되면서 최근 5년간 5~6%의 고도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석유자원 뿐만 아니라 백금이나 망간 등 비석유자원도 다량 보유
 - 중국, 일본과 비교하여 지원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아프리카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기술, 발전 경험 등)을 파악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
 - 새마을운동은 국가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소프트파워

[자원전쟁터 아프리카서 中日 ‘원조전쟁’ (12.3, 머니투데이)]

-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인도주의 명분보다 실리추구 목적이 뚜렷
 - 덴마크 - 베트남에 대한 대규모 원조 제공으로 ‘코펜하겐 기후협약’에서 베트남의 지지를 획득
 - 일본 - 수출시장 확대와 원자재 조달을 위해 아시아에 대규모 원조 제공, ‘93년부터 자원 확보를 위해 ‘도쿄아프리카개발회의(TICAD)’를 창설하고 對아프리카 자원외교 추진
 - 중국 - ‘06년 ‘아프리카 개발포럼’을 개최하고 아프리카 8개국에 90억달러 지원 약속

[베트남에 신용평가 노하우 전수... 中企 대출 늘려 (12.1, 조선일보)]

- 경제개발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기획재정부의 ‘경제개발경험 공유 사업(KSP)’, 개도국의 자립기반 설립에 도움
 -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리비아 등 총 14개 국가에 KSP 무상 제공
 - ‘06년 베트남과 ‘금융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베트남에 신용보증제도 및 수출보험제도 구축 등 금융 노하우를 전수
 - 동 사업 이후, 베트남개발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개시하여 약 1,000여개의 중소기업이 보증 및 대출을 받아 수출 확대, 베트남 경제 발전에 기여

[2010~2012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발표(12.6, 동아일보 외)]

- 정부, 한국형 ODA 모델정립 등 10대 과제를 포함하는 범정부 차원의 ‘2010~2012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발표

2010~201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10대 과제

한국 경제 '성장 프런티어' 확충	❶ 글로벌 통상네트워크 구축 ❷ 전략적 외국인 투자 활성화 ❸ 중소기업 대외경쟁력 제고 ❹ 금융부문 글로벌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글로벌·역내 파트너십 강화	❺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경제협력 추진 ❻ 전방위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❼ 녹색성장을 위한 대외부문 지원체계 강화
국제사회 기여 및 대외부문 인프라 구축	❽ 한국형 ODA 모델 정립 ❾ G20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대외부문 인프라 구축 ❿ 대외부문 전문인력 양성 및 지식관리체제 강화

○ 한국형 ODA 모델 정립 기본 내용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세계적인 정책자문 사업으로 발전
-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일괄 지원하고, 30개 이내의 유무상 통합 중점 지원국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

[총리실 ODA국 '신설'(12.17, 이데일리)]

□ 총리실에 ODA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 등의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7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2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확정될 예정

- ODA국은 10명 내외로 구성되어 보다 효율적인 ODA 지원·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기존 총리실 내의 인력 조정 및 실무인력 증원을 통해 운용 예정

[우리나라, 원조 차관 전액 상환 완료(12.15, 매일경제)]

□ 재정부, IDA 차관(3,350만불)의 조기 상환을 통해 원조 성격의 차관 전액 상환 완료 발표

- IDA에서 받은 차관은 1962년~1973년간 1억 1,600만불이었으며, 철도시설 개·증설, 디젤기관차 도입 등에 사용되었음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 내년 신설(12.17, 중앙일보)]

- 이명박 대통령, 덴마크 코펜하겐의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 공식 표명
-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는 2010년 상반기 설립 예정이며, 우리나라에 본부를 두는 최초의 국제기구가 될 전망
- 선진국과 개도국을 아우르는 글로벌 파트너십에 기반해 녹색성장 방법론을 제시하는 글로벌 싱크탱크로 발전시킬 계획
-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과 연계, 아시아 지역 개도국 녹색성장 정책 수립 지원 예정

[JICA, 인도네시아에 프로그램차관 제공(12.10, JICA 홈페이지)]

- JICA, 인도네시아에 374억 4,400만엔 한도의 ‘기후변화대책 프로그램차관’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
- 본 차관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JICA가 공동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달성을 평가하여 차관을 집행하는 ‘정책·제도 지원형 차관’
- 차관 지원 조건

구 분	금리(%)	상환기간(거치기간)	조달조건
기후변화대책 프로그램 차관	0.15	15년(거치기간 5년)	언타이드

[인도네시아 · 캄보디아 · 우즈베크에 경제발전경험 전수(12.23,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경제 전반에 대해 포괄 컨설팅을 지원하는 중점 지원국을 '09년 베트남에서 '10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중
 - 중점지원국에는 9~10억원의 예산으로 연구진 15명을 파견해 경제전반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음

[방통위, 방송통신 관련 ODA 확대 예정(12.21, 뉴시스)]

- 방통위,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 및 방송통신 ODA 확대를 통해 방송통신 코리아 브랜드 강화할 계획
 - 개도국 초청연수, 정책자문 및 방송장비 지원 사업 등의 분야에 KOICA, KOTRA, EDCF 등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원규모 확대할 예정

[2010년을 ODA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12.23, 연합뉴스)]

- 정부, 2010년을 ODA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ODA 확대 등 기여외교 강화에 노력할 것을 천명
 - '10년은 대외적으로 OECD DAC 회원국으로서 공식활동을 시작하며, 국내적으로 우리 ODA 집행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가속하는 ODA 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
 - '선택과 집중' 이라는 원칙아래 효율적인 개도국 지원을 통해 국제적 영향력 확대 도모
 - '10년 ODA 예산을 올해 3,575억원 대비 19.4% 증가한 4,270억원으로 증가

작 성 : 조 은 진, ejcho@koreaexim.go.kr, 김 기 혜, kkhmoon@koreaexim.go.kr

목차보기

본 자료는 선진국의 ODA 제도와 관행·동향을 분석·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은행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분들께 배포하고자 2005년 3월부터 발간되었습니다.